

제422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임시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2월19일(수)

장 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
2.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9)
3.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1)
4. 남해의 이순신해 병행 표기 및 이순신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7)
5. 선박재활용법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24)
6.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81)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0)
8. 마리아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5)
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1)
10.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6)
11.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9)
12.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23)
13.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42)
1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3)
15.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15)
16.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16)
17.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25)
18.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26)
19.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27)
20.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41)

21.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10)
22.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59)
23.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65)
24.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86)
25.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99)
26.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99)
2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05)
28.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48)
29.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80)
30.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22)
31.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40)
32.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34)
3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99)
34.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01)
35.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73)
36.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07)
37.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7)
38.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890)
39.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2)
40.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73)
41.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24)
42.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28)
43.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78)
44. 업무현황보고
  - 가. 해양수산부
  - 나. 해양경찰청
  - 다. 부산항만공사
  - 라. 인천항만공사

마. 여수광양항만공사  
바. 울산항만공사  
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상정된 안건

1.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 ..... 5
2.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9) ..... 5
3.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1) ..... 5
4. 남해의 이순신해 병행 표기 및 이순신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7) ..... 5
5. 선박재활용법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24) ..... 5
6.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81) ..... 5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0) ..... 5
8. 마리아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5) ..... 5
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1) ..... 5
10.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6) ..... 5
11.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9) ..... 5
12.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23) ..... 5
13.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42) ..... 5
1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3) ..... 5
15.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15) ..... 5
16.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16) ..... 6
17.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25) ..... 6
18.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26) ..... 6
19. 향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27) ..... 6
20.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41) ..... 6
21.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10) ..... 6
22.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59) ..... 6
23.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65) ..... 6

24.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86) .....	6
25.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99) .....	6
26.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99) .....	6
2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05) .....	6
28.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48) .....	6
29.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80) .....	6
30.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22) .....	6
31.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40) .....	6
32.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34) .....	6
3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99) .....	6
34.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01) .....	6
35.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73) .....	6
36.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07) .....	6
37.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7) .....	6
38.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890) .....	6
39.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2) .....	6
40.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73) .....	6
41.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24) .....	6
42.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28) .....	7
43.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78) .....	7
44. 업무현황보고 .....	7
가. 해양수산부	
나. 해양경찰청	
다. 부산항만공사	
라. 인천항만공사	
마. 여수광양항만공사	
바. 울산항만공사	
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어기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 심사 및 해양수산부 등 7개 기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심사 방식은 어제와 동일하게 법률안과 업무현황보고를 일괄하여 상정하여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해당 기관의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에 전체 안전에 대한 질의답변을 병합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도 어제와 같이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송명달 차관은 오전에 장관을 대리해서 민생경제점검회의 참석차 이석하는 것으로 간사 간에 양해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1.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07분)

○위원장 어기구 먼저 법률안 심사와 업무현황보고 전에 의사일정 제1항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청회는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농어민기본소득 관련 5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9)

3.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1)

4. 남해의 이순신해 병행 표기 및 이순신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7)

5. 선박재활용법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24)

6.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81)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0)

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5)

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1)

10.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6)

11.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9)

12.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23)

13.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42)

1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3)

15.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415)

16.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416)
17.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25)
18.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26)
19.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27)
20.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41)
21.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10)
22.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59)
23.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65)
24.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86)
25.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99)
26.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99)
2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05)
28.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48)
29.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80)
30.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22)
31.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40)
32.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34)
3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99)
34.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01)
35.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73)
36.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07)
37.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7)
38.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890)
39.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2)
40.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73)
41.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24)

42.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28)

43.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78)

44. 업무현황보고

가. 해양수산부

나. 해양경찰청

다. 부산항만공사

라. 인천항만공사

마. 여수광양항만공사

바. 울산항만공사

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0시08분)

○위원장 어기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3항까지 42건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44항 소관기관의 업무현황보고 등 총 4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전명과 법률안 등의 원문,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19항, 제38항, 제42항, 이상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은 영업자가 업종 전환, 경영난 등으로 단기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신고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탄력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상조난사고 통계의 작성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수상구조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국회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선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3항까지, 42건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선영 전문위원입니다.

해수부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 하단입니다.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박재활용법안은 500t 이상의 국제항해 선박에 대하여 식면 등 유해물질목록 작성과 적합증서의 비치의무를 부여하고 선박재활용계획의 승인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선박재활용협약의 국내법적인 수용과 제재규정 마련 취지에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국내법과의 관계 측면에서 제정안의 선박재활용계획과 해양환경관리법상의 선박해체 신고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 제도의 목적, 적용 범위 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재규정의 명확성 제고 측면에서 형벌 부과행위와 과태료 부과행위를 구분하는 부분 등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자료 6페이지 하단입니다.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안관리법 개정안은 개발사업에 대해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 연안 침수·침식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속 가능한 연안개발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사전검토 대상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안으로 포괄 위임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전검토를 이행하는 데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점과 해당 절차가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에서 이를 구체화하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자료 13페이지 상단입니다.

임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복구 지원에 있어서 동일 가구에 속하는 구성원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별도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별 구성원별로 지원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행안부·농림부에서는 재난 지원 시에 가구를 기본 단위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지 여부를 지침에서 별도로 판단하고 있는 반면 해수부는 거주를 같이하면 하나의 가구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이러한 보상 내용의 차이점을 해소하고 어가에 대한 충실한 지원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법 체계적인 관점에서 어업재해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와 어가의 개념을 보다 확대하여 취지를 반영하는 방안 등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해양경찰청 소관입니다.

자료 17페이지 하단, 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개정안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연안사고 예방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관리 계획서 신고 수리 전에 참가자의 모집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계획서 신고 수리 전에 참가자의 모집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할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과태료 조항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어제와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



을 위해서 소속기관의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대체토론과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업무현황보고 청취 후에, 주요 공공기관은 기관장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 후에 업무현황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양수산부 등 업무현황보고를 통해서 해양수산 분야의 당면 과제인 글로벌 선도 해상물류 공급망 조성,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어촌과 섬 등 연안지역 활력 증진 등의 문제와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어선 전복사고 등의 예방을 위한 진지하고 깊이 있는 해법 모색의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먼저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한 후에 부처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해양수산업의 발전과 해양수산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준비한 인사말씀에 앞서서 최근 잇따라 발생한 어선 사고에 대해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들과 위원님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고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보완해서 어선 사고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해양수산 분야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모든 관계자분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특히 작년 우리 해운기업은 선복량 1억t을 달성해서 세계 4위의 해상수송력을 확보하였고 수산식품 수출 규모가 30억 불을 돌파한 가운데 김수출액이 2년 연속 1조 원을 초과 달성하는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해양수산부 전 직원은 해양수산 민생 안정을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해양수산 분야를 둘러싼 여건과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특히 2025년도에는 기후변화 가속화로 인한 수산물 수급 관리와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인한 물류 공급망 재편 가능성을 가장 크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수산물 수급이 언제든 불안정해질 수 있고 재해 피해도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불안한 국제 정세와 트럼프 신정부의 보호무역 기조로 인해 물류 공급망의 불확실성도 한층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연안과 어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고 해양 사고가 증가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우리 해양수산부는 더 많은 노력과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올 한 해 당면한 현안 과제를 해결하고 민생에 온기를, 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해양수산을 구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먼저 국민과 어업인의 민생을 뒷받침하는 수산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수급 관리를 강화하여 수산물 물가 안정에 더욱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김의 경우 유통질서를 점검하고 적극적인 수급 관리 조치를 통해 가격 안정을 도모하겠

습니다.

수산물의 유통·가공체계도 효율성을 높이고 K-씨푸드의 수출 증대를 위한 세밀한 전략을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연근해어업은 산출량 중심의 어업관리체계로의 전환을 확대 시행하고 양식업 관리 혁신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해상물류 공급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부산항 진해신항을 본격적으로 조성하는 한편 동·서·남해 권역별 항만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출을 뒷받침하는 물류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HMM의 프리미어 얼라이언스 플러스 MSC 협력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탄소 규제를 관련 산업 도약의 발판으로 이용하여 친환경적인 미래형 항만·물류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셋째, 활력 있는 연안과 살고 싶은 어촌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을 기반으로 다양한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연안지역 활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양플랜트, 친환경 선박 소재 등 연안지역 경제 도약을 이끌 해양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통해 어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인프라를 차질 없이 확충하고 교통과 물류 복지 확대로 어촌과 섬 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승선원 2인 이하 소형 어선에서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작년 12월부터 기상청과 협업하여 시범 운영 중인 풍랑경보 사전예고제도를 전 해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어선에 대한 안전검사 대상과 항목도 확대하고 기후변화에 의한 해황 악화가 어선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대응하겠습니다.

국고여객선 내에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장비를 설치하고 GPS 중단 등 전파재난 대응을 위한 지상파항법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수신기도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부와 협업하여 육상 발생 쓰레기의 해양 유입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폐어구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나아가 어업인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개발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해양공간 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영토 수호를 강화하고 해양수산 분야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겠습니다.

독도와 무인도서 관리를 강화하고 동해 왕돌초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하는 한편 심해저 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도 마련하겠습니다.

4월에 열리는 제10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와 APEC 해양관계장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2028년 유엔 해양총회를 우리나라가 유치하여 글로벌 해양주도권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해양수산부 전 직원은 오늘 보고드리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매진할 계획이며 이번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조언을 적극 반영하여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 업무현황과 주요 현안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송명달 차관은 민생경제점검회의 대참 중입니다.

이시원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성범 해양정책실장입니다.

홍래형 수산정책실장입니다.

윤현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입니다.

최용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입니다.

남재현 항만국장입니다.

정도현 대변인입니다.

류종영 감사관입니다.

권순욱 정책기획관직무대리입니다.

오행록 해양환경정책관입니다.

김명진 국제협력정책관입니다.

최현호 어업자원정책관입니다.

서정호 어촌양식정책관입니다.

노재갑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장입니다.

양영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입니다.

정규삼 국립해양조사원장입니다.

김혜정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입니다.

김재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입니다.

강정구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입니다.

양동엽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시원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업무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이시원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25년도 해양수산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 1페이지 기관 현황부터 4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5페이지 정책목표 및 과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해양수산부는 ‘민생에 온기를, 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해양수산’이라는 정책 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과 어업인의 민생을 뒷받침하는 수산업 육성 등 5대 주요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첫째, 국민과 어업인의 민생을 뒷받침하는 수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먼저 선제적 수급 관리로 수산물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수산물 할인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하고 정부 비축, 민간 구매 지원 등을 통해 수급 안정을 유도하는 등 물가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김의 경우 외해 시험양식, 계약재배 등을 통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물김 생산량 확대에 의한 산지가격 변동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선진 유통·가공 체계를 구축하고 수산물 수출을 확대하겠습니다.

부산공동어시장 등 수산물 유통시설을 현대화하고 소비자의 신선 수산물 직매장 설치를 확대하는 등 수산물 유통 인프라를 선진화하겠습니다.

또한 수산물 가공시설과 업체를 집적화하고 규모화하여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수산식품 수출액 31억 5000만 불 달성을 위해서 국가별·품목별 맞춤형 수출 전략을 촘촘히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에도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연근해어업은 산출량 중심의 어업관리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양식업의 경우 권역별 스마트양식클러스터를 차질 없이 구축하고 양식 면허제도 개선과 함께 지역 맞춤형 내수면산업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 등 신규 인력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유희 마을어장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어선 및 양식장 임대료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둘째, 글로벌 선도 해산물류 공급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세계 최대 거점 항만으로 조성 중인 부산항 진해신항 공사를 올해부터 착공하고 컨테이너 터미널 간 운영 통합 추진 등을 통해 항만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인천, 광양, 새만금, 평택·당진, 울산, 동해 등 권역별로 특화된 항만 인프라를 차질 없이 확충하여 배후산업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항만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해 혁신 방안을 금년 하반기까지 마련하고 국내 항만기업의 해외 진출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수출입 물류망 구축을 위해 친환경 선박을 확충하고 해상 수송 루트 다변화를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대표 국적 원양선사인 HMM의 신규 협력체계인 프리미어+MSC 체제가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물류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수출입 기업의 물류를 적극 지원하고 국적선사의 경영 안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외 물류센터 확대 등 해외 물류 거점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금년 상반기

까지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디지털·친환경 미래형 물류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올해 광양항 자동화 항만 테스트베드를 착공하고 완전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과 더불어 개발된 기술의 실증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탄소 규제를 우리 해운·항만·물류산업의 도약의 기회로 삼아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탄소 규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적선사에 대한 금융지원과 함께 친환경 항만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위한 글로벌 협력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셋째, 활력 있는 연안과 살고 싶은 어촌을 조성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개소당 총 1조 원 규모를 투자하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 대상지 두 곳을 선정하고 다양한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해양레저관광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산항 북항과 인천항 내항에서 진행 중인 항만 재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원도심의 경제성장 거점으로 탈바꿈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을 개관하여 해양문화 체험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해양 신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특히 향후 약 10조 원 규모의 동남아 해양플랜트 재활용·해체 산업 시장을 우리 기업이 선점할 수 있도록 해양플랜트 기술개발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파력발전 기술개발, 친환경선박 연구인프라 확충 등 친환경 신기술개발도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성장 잠재력이 높은 우수 기업을 대상으로 단계별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어촌과 섬의 소멸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올해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신규 대상지 26개소를 신속히 선정하고 어촌에 민간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어촌발전특구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등 귀어인의 주택단지와 일자리를 연계한 청년 바다마을 조성 사업 대상지 3개소도 선정하겠습니다.

소외도서의 선박 운항 지원을 지원하고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 대상을 모든 섬 지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의료서비스가 열악한 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넷째,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어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승선원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풍랑경보 사전예고제를 전 해역으로 확대하는 등 어업인과 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국고여객선 내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장비를 보급하고 GPS 중단에 대응하여 지상파항법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한편 수신기도 보급하겠습니다. 아울러 연안 개발사업

추진 시 침식·침수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국민안심해안 사업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질서 있는 해양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해 환경부와 협업하여 육상 발생 쓰레기의 해양 유입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어구보증금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폐어구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대형 해양보호구역 2개소를 신규 지정하고 비식생갯벌에 대한 블루카본 신규 국제인증을 추진하는 등 해양환경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한편 질서 있는 해양공간 관리를 위해서 어업인 입장과 계획입지제도가 반영된 해상풍력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영토 수호를 강화하고 해양수산 분야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겠습니다. 제5차 독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해 왕돌초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하는 등 우리 해양영토의 관리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4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10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와 APEC 해양관계장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2028년에 개최되는 유엔 해양총회를 유치하여 글로벌 해양 리더십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주요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양사고 인명피해 저감방안입니다. 지난해 해양사고로 인한 사망·실종 등 인명피해는 총 165명이었고 대형 해양사고도 10건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2월까지 총 3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이 중 어선사고로 인한 피해는 34명입니다.

그간의 대응 상황입니다. 작년 5월 연근해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한 이후 어선원 안전감독관을 배치하고 어업인 안전조업교육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중입니다. 다만 2인 이하 승선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등의 과제는 관련 행정 및 입법 절차 완료 후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달 초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선 사고 원인 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대응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어선안전 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기존에 수립한 대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최근 발생한 사고 원인을 분석하여 기존 대책을 철저하게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교육과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말까지를 긴급 안전 점검기간으로 지정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수협 등과 함께 안전수칙 준수 등을 위한 특별캠페인도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해양사고 인명피해 저감 TF를 통해서 인명사고 저감을 위한 안전관리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철저히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현안으로 수산물 물가관리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 기준 조기·갈치 등 대중성 어종 가격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 수급·가격 동향입니다. 최근 적정 수온이 형성되어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금년 1

월까지 물김 산지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나 이후 자체 출하물량 조절 등으로 회복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마른김 도매가격의 경우에는 1월 초 이후 지속 하락하는 반면 소매가격은 1월 중순경 상승하였다가 이후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수급·가격 관리방안입니다. 우선 비축 물량을 수시 방출하는 등 공급을 확대하고 대중성 어종 등을 대상으로 수산대전 등 할인행사를 통해 가격 안정을 적극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직거래 장터를 운영해서 어업인과의 상생도 유도하겠습니다.

최근 문제가 된 김 수급·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현재 관계 기관과 김 가공·유통업체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고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수매자금 저리 용자를 지원하고 유통시설을 활용하여 마른김 보관 장소를 지원하는 등 김 물가와 수급 관리에 앞으로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부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민생에 온기를 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해양수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임 김용진 해양경찰청장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해양경찰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 해양경찰청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1만 3000여 해양경찰은 각종 해양재난과 사고로부터 국민들을 지켜 내기 위해 거친 파도에 맞서 싸우며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급변하는 해양 환경과 국제 정세 그리고 과학기술의 변화로 인한 대내외 리스크와 불확실성은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강한 계절풍과 높은 파고 등 악기상 속에서 해양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응을 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은 지난주부터 전 해역에 해양안전 특별 경계를 발령하여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양사고에 즉각적인 대비·대응을 위해 전국 해경서 함정과 장비를 사고 위험 해역에 전진 배치하고 다중이용선박 항로와 조업선박 분포해역을 중심으로 집중 안전관리를 실시하며 24시간 비상 출동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에 해양경찰 전 직원은 긴장감을 유지하며 우리 바다를 더욱 안전하게 지켜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해양경찰은 바다에서의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두 축으로 주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정된 경비 세력을 보강하고 독도·이어도 등 전략적 경비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각종 해양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형 경비체계 MDA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 안전에 역량을 집중하여 촘촘한 해양종합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기별, 유형별 해양위험을 분석하여 사고에 대비한 안전관리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위험 사고에

특화된 구조역량을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조직 운영에 있어서는 기본과 원칙을 제일의 행동규범으로 하여 보다 신뢰받는 해양경찰이 되겠습니다. 업무 수행의 기준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여 양질의 해양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해양경찰은 앞으로도 주어진 임무에 더욱 충실하여 대한민국 바다를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해양경찰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참석한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성식 차장직무대리입니다.

여성수 경비국장입니다.

박재화 구조안전국장입니다.

김인창 수사국장입니다.

고민관 정보외사국장입니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입니다.

서정원 장비기술국장직무대리입니다.

오상권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입니다.

이명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입니다.

장인식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입니다.

김성종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입니다.

박상춘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 정책, 현안 사항 순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주요 정책과 현안 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주요 정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금년도 해양경찰은 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를 만들기 위해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현장과 국민 중심으로 주요 정책을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주요 정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보다 전략적인 해양안보와 해양주권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성 정보를 활용하여 해역별 불법조업의 특성을 분석하고 해수부·해군 등 유관 기관과 합동단속을 통해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엄정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경계미확정해역에 경비구역 신설, 시기별 목적형 순찰 등 전략적 경비활동으로 해양 관할권을 적극 수호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첨단감시자산을 기반으로 한 미래형 해양경비체계 구축을 위해 2026년까지 위성센터를



준공하고 관측위성을 비롯 해양 특화 무인기 등 광역 감시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해양경비법 개정과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 개발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해양 경비력 강화를 위해 함정·항공기 등 전략자산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올해 개창 예정인 정비창 운영으로 현장 임무 수행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둘째, 현장 중심의 협업형 해양안전 관리를 통해 해양 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위험 시기와 요인에 맞춰 안전 순찰과 계도를 강화하고 유관기관 및 연안 안전지킴이 등 지역 주민들과의 협업을 통해 선제적으로 해양안전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상황 관리와 함께 복합적인 해양재난에 대비한 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첨단 수색구조장비를 지속 확보하여 구조 역량·인프라를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 첫 출범하는 해양재난구조대의 조기 안착을 위해 해역별 특성을 잘 아시는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운영지침을 마련하는 등 역할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선박교통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동해·포항 광역 VTS를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 전국 VTS 통합연계망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속의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SOS 버튼 누르기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고 학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 변화에 따른 해양오염사고 대비·대응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대형화학방제함을 건조하는 한편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힘쓰겠습니다.

14쪽입니다.

셋째, 첨단 해양치안 역량 강화를 통해 수사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해양 범질서 확립을 위해 건설비리 등 부패범죄의 기획수사를 강화하고 지방청 중심의 맞춤형 특별단속, 인터넷을 통한 불법 어구 단속 등 사이버 수사력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이 지능화됨에 따라 수중드론 등 신종 장비 도입을 통해 단속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요 마약 생산국과 핫라인을 구축하여 국제 공조 채널도 확대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넷째, 민생과 현장 그리고 역량 중심의 조직운영과 국제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미래의 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임무를 고도화하겠습니다.

해양재난 현장을 구현한 가상 융합기술 기반의 교육훈련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행정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소통과 존중에 기반한 팀워크로 현장과의 소통을 활성화하여 문제 해결 중심의 일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17쪽입니다.

국제적으로는 유럽과 아프리카, 태평양 도서국 등 대륙별 주요 국가와의 해양안보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경비함정 양여 절차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후관리체계를 마

련하여 경제적 효과도 창출하겠습니다.

아울러 사고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관리하고 회복하도록 돕는 등 현장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복지 인프라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다음, 현안 사항입니다.

21쪽입니다.

다가오는 성어기에 대비하여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허가 어선의 조업질서는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기상불량 시 NLL과 어업협정선을 넘어오는 무허가 어선의 불법조업은 여전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해역별·시기별 경비함정을 증강 배치하고 입체적 통합 감시, 전술 개발을 통해 조업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법 외국어선에 직접계류가 가능한 단속 전담함 도입을 통해 단속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두 번째 현안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민간 구조세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한 해양재난구조대법이 지난해 제정되었고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과 함께 다양한 해양사고에 신속하고 안전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직과 인력을 정비하고 재난상황별 표준절차를 수립해서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소속감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각종 포상들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관련 예산 확보에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바다 지키기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임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항만공사사장 송상근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2월 10일부로 부산항만공사 사장으로 새로 부임한 송상근입니다.

먼저 부산항만공사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부산항은 지난해 세계경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물동량인 2440만TEU를 처리함으로써 세계 2위의 환적 중심항의 위상을 굳건히 하였습니다. 올해도 저희 임직원들은 부산항이 동북아 중심항을 넘어 세계적인 글로벌 항만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업무에 집중하겠습니다.

첫째, 신항 서컨테이너 부두, 진해신항 등 최첨단 자동화 항만 인프라를 구축하고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스마트 항만배후단지도 적기에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범지구적인 기후위기 극복 흐름에 발맞추어 저탄소, 에너지 자립, 환경 경영을 통한 탄소 제로를 달성하고 항만물류 통합 플랫폼인 체인포털의 기능을 고도화하여 항만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디지털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지역과 상생하는 항만 경영을 구현하겠습니다.

북항 재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만들고 국제여객과 크루즈를 활성화하여 부산항을 해양관광의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넷째,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부산항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해외물류거점을 확대하여 공급망 위기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우리 물류기업의 물류비 절감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만 종사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부산항 전반에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제언들은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규호 경영본부장입니다.

홍성준 운영본부장입니다.

이상권 건설본부장입니다.

(인사)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기관의 상세한 업무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항만공사 이경규 사장님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항만공사사장 이경규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해양산업 발전에 대한 각별한 지원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천항은 수도권 관문항으로서 지난해 역대 최대인 컨테이너 355만TEU를 처리하는 등 수출입 물류기지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특히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대내외 위협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저희 공사는 이러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인천항이 동아시아 물류거점항으로 자리매김하고 글로벌 해양관광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핵심 업무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콜드체인, 전자상거래 등 배후단지 특화구역에 경쟁력 있는 물류기업을 유치하고 컨테이너 항로를 다변화하여 신규 물동량을 창출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역사·선사 등 항만 이용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생산성 향상, 통항안전 강화 등 편리하고 경쟁력 있는 항만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인천항 최초 완전 자동화 부두인 인천신항 1-2단계 컨테이너 터미널과 아암물류

2단지 2단계 항만 배후단지 조성 등 지속적인 항만 인프라 공급을 통해 글로벌 항만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다각적인 여객 마케팅을 통해 항만과 공항을 연계한 모항 크루즈를 확대하고 한중 카페리 항로의 완전한 재개에 대비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한 여객수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과 골든하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시민친화형 해양문화공간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박·차량 등 오염원별 맞춤형 관리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작업장 안전 관리 체계 및 항만 보안시스템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인천항만공사 전 임직원은 위원님이 주신 고견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공사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천항만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철 경영본부장입니다.

김상기 운영본부장입니다.

정근영 건설본부장입니다.

(인사)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수광양항만공사 박성현 사장님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박성현 안녕하십니까?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박성현입니다.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사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수광양항은 석유화학, 자동차, 컨테이너, 철강, 원유 등 다양한 화물을 처리하는 종합 항만으로 해운경기 침체, 석유·철강 산업 위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총 물동량 2억 7000만t으로 국내 2위, 수출입 물동량 2억 1000만t으로 국내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컨테이너 물동량의 경우 영업활동 강화와 운영체계 개선 등 다양한 노력으로 6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되어 전국 항만 중 가장 높은 7.8% 증가율을 기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여수광양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먼저 2029년까지 국내 기술 중심의 완전 자동화 항만을 차질 없이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 북측 배후단지 등 신규 항만 배후단지를 개발하고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여 화물 창출형 산업중핵항만으로서의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습니다.

아울러 2023년 5월에 인수한 여수세계박람회장을 국내외 대표 해양관광 거점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사후 활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공사는 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 중에 있지만 기관 매출

액의 2배가 넘는 박람회장 정부 선투자금 3658억 원의 일시상환 요구로 재무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는 등 박람회장 활성화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여수광양항의 발전과 여수세계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항만 조성, 안전 제일 경영을 실현하고 고객 중심 항만 운영, 지역과 상생 발전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은 우리 여수광양항 발전 전략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 업무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저희 공사 주요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학범 경영부사장입니다.

홍상표 운영부사장입니다.

권동진 개발사업부사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항만공사 변재영 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항만공사사장 변재영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해양수산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울산항만공사의 2025년도 업무에 대해 보고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울산항만공사의 전 임직원은 울산항에 대한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업무를 차질 없이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세계 경기 악화 및 국제 분쟁 등의 리스크로 대내외 물류 공급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저희 공사는 울산항에 미치는 위험 요인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관리하면서 에너지 물류허브 구축과 항만 운영 효율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울산항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 중심기지로 육성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저희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친환경 에너지 물류를 선도하는 항만이 되겠습니다.

탄소중립 추진과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에 있어 청정에너지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울산항에 LNG·메탄올·암모니아 등 친환경에너지 물류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여 산업계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친환경에너지 특화 항만으로 발돋움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객 중심의 항만 운영을 하겠습니다.

울산항 이용 선박의 안전을 위해 항만시설 개선과 유지준설을 시행하고 고객 니즈에

맞추어 부두 기능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항만운영정보 통합플랫폼인 포트와이즈의 기능을 고도화하는 한편 항만작업 공유 AI 모델을 구축하여 고객 친화적인 지능형 스마트 항만을 구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안전 항만을 구축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이행과 울산항 미세먼지 감축 등 대기질 개선을 추진하고 저희 공사가 최초로 개발한 하역안전지수를 전국 항만으로 확대 적용하여 안전을 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 재난대응능력 제고와 시스템을 통해 울산항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언을 통해 미흡한 점은 보완하고 잘못된 점은 개선하여 저희 공사를 한 단계 성장시키는 밑거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세 업무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울산항만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락 경영부사장입니다.

정순요 운영부사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노동진 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먼저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추진 사항과 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쁜 의정 활동 속에서도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어기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요 추진사항의 보고에 앞서 최근 발생한 어선 사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걱정과 염려가 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로 어업인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올해 저희 수협중앙회는 전국 회원조합의 경영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전사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조합지원자금 2500억원을 조속히 집행하여 연체 채권의 조속한 정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을 도모할 것입니다.

우리 수산업을 이끌어 가는 어업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어장 변화와 해상풍력 설치 문제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각종 수산 현안에 대해 보다 철저히 대응할 것입니다.

우수한 우리 수산물이 국내와 해외 모두에서 널리 소비되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 역시 지상 과제로 삼겠습니다.

우리 수산업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산업입니다. 그 가치와 역

할이 유지되고 또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국회와 더욱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마련한 업무 과제를 잘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부분입니다. 어업인 권익 및 어촌경제 활성화 증진을 통해서 우리 수산업이 한 단계 도약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수협중앙회는 어업인과 회원조합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협중앙회 및 수협은행의 임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기성 지도경제대표이사님.

조신희 조합감사위원장님.

신황용 기획부대표님.

이영준 경영지원부대표님.

우동근 교육지원부대표님.

이옥진 금융지원부대표님.

다음, 신학기 수협은행장님.

도문옥 수석부행장님입니다.

(인사)

끝으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수협중앙회 및 수협은행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를 병합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 한 번씩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답변 포함 5분입니다.

이 약속을 꼭 지켜 주시기 바라고 문대림 위원님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장관님, 자료화면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메인 화면입니다. 장관 인사말에서도 얘기했듯이 김 수출을 윤석열 정부 이래 최고의 실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해양수산부의 정책 성공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어쨌든 김 수출이 세계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한다며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뒷면에는 김 양식 어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마지막 페이지, 21페이지에 보면 매주 현장점검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취임 이후부터 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취입 이후부터?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문대림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김 가격 변동과 관련해서 올해 1월에 물김인 경우 킬로당 763원, 지난해 대비 절반 수준이었지요. 최고가 대비 83% 수준으로 급락했습니다. 이 과정에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장관 취입 이후 매주 이렇게 현장점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급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김 어가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과정에 무엇을 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른김 가격은 장당 103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47원까지 40% 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해 폐기된 물김 양이 얼마지요? 몇 톤이었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전체적으로 보면……

○문대림 위원 54t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과잉 생산으로 무려 6000t에 가까운 양이 폐기가 된 것입니다. 수천 톤의 물량이 폐기가 된 것은 해수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다. 동의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문대림 위원 김 양식장과 관련해서 해양수산부는 김 양식장 2000ha를 개발한다고 발표했었지요? 김 수출이 증가한다며 작년 7월에는 축구장 380개 넓이에 달하는 2700ha의 김 양식장 개발정책을 펼쳤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니까 김 수출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오름세를 보이던 마른김 물가를 잡겠다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부가 간과한 게 무엇이나? 가공업체들의 생산능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양식장만 확대하면 된다. 가공업체들의 생산능력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 때문에 결국 처리를 못 하고 폐기가 되는 이런 과정을 겪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물김 공급이 증가하면 그 물량을 수용할 가공업체들의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데 이러한 기초적인 경제 상식조차도 없이 해수부가 일을 추진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업무보고에는 김 유통 관리 및 지원 방안 해 가지고 쪽 하거든요, ‘이상 징후 발견 없음’. 가공업체들이 이상 징후가 있었습니까? 없는 거지 않습니까? 물량의 문제, 생산능력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업무보고는 정부 정책의 실패를 교묘하게 은폐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가격 하락의 문제가 유통질서의 문제입니까? 수급 조절의 문제지. 수급 조절의 문제는 해수부 정책의 문제이기도 하다.

양식장 확대, 좋습니다. 그러면 양식장 확대에 따라 가지고 가공업체의 가공 능력 이런 것도 동시에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문대림 위원 그리고 이렇게 6000t에 상회하는 물김들을 폐기하는 상황 속에서 장관은 한 인터뷰에서 ‘우선 생산이 잘돼야 유통·가공이 잘되지 않겠냐’며 이런 발언 한 적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이게 물김 생산 농가들의, 김 생산 농가들의 정서를 반영한 장관의 워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생산에 대한 부분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니까 수급 조절에 관한 문제를 담아내지 못한 장관의 어설픈 발언이다 저는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산지 폐기 비용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요. 차조금 규모 확대 적극적으로 검토하십시오, 대안 마련하셔 가지고.

이렇게 업무보고에 뭔가를 하는 듯하게 했지만 정부 잘못을 다 숨기고 김 생산 어가들이 뭔가 잘못하는 듯한 이런, 그래서 점검·단속·생색내기 하지 말고 실질적 지원 하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올해 부족한 부분은 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삼석 위원 문대림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김은 검은 반도체라고 하고 장관께서도 보고한 내용대로 효자 상품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수산물 중에서도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부각되고 있지요. 맞지요?

물김 생산자들은 자식을 키우는 심정으로 물김을 생산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우리 전남 일부 지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다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물김 폐기량을 마른김으로 환산하면 187억의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했었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고 전남도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물김을 폐기하지 않고 마른김과 조미김으로 가공했을 때 부가가치는 2배가량, 약 360억 원 정도 이익이 예상됐었다라는 그런 보고도 있었고 세 번째, 해수부가 비축사업에 따라 비축했을 경우 비축사업비가 228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130억 원의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처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고 생산자들에게 소득을 안겨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가 답인 양 했던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 이런 불상사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수요 예측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물김을 과잉 생산해 냈을 때의 대안으로 가공시설을 확충하고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물김 그 자체를 보관하는, 비축하는 그런 정책 그리고 물김을 가지고 마른김으로 생산하기 전 단계에서의 가공 이런 기술들이 선행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니까 연구를 좀 해 주시고.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현대화를 하고 가공시설 확충을 하더라도 물김의 특성상 주산지에다가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지적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했으면 쓰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알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그다음에 여객선 공영제는 윤석열 대통령 국정과제라고 몇 번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어요. 4차 대중교통 기본계획에도 설명을 했는데, 과연 이

게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지적을 하니까……

왜 예산에 공영제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았는가, 이것은 해수부 의지 부족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지만 혹자는 무관심이라고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지적을 또 피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니까 그런 사유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관련해서 본 의원이 지난 17일 자로 해상대중교통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물론 동의는 하시겠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서삼석 위원 문제는 여야 위원들 간에 논의도 있고 상임위 통과도 있고 본회의 통과도 있겠지만 저는 통과할 것으로 가정하고 재정당국의 마지막 관문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해수부에서도 좀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것을 사전에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그다음에 전국에 3300개의 섬이 있는데 인지도가 높은 몇 곳을 제외하고서는 관광이 상품화돼 있거나 정보가 공유돼 있거나 찾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그러면 이 정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고, 섬 관광 활성화 대책 수립한 지 6년이 지났는데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개선책을 마련해서 본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간이 다 됐는데, 동절기 잦은 해양사고로 해경대원들 피로가 상당히 누적되어 있습니다. 대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해수부가 무엇을 했는지를 모르겠는데 안 했으면 대책을,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 수협중앙회 회장님한테도 지원할 수 있으면 좀 해 달라는 그런 부탁도 했으니까 그런 것도 강구를 해 주셔서 사기 진작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예.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교 위원 장관님, 지난해 우리 해수부 국정감사 때 본 위원이 내수면산업에 대한 발전방안 필요하다고 지적을 심도 있게 한 바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김선교 위원 내수면산업의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요청드렸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김선교 위원 지난 연말에 해수부에서 ‘정체된 내수면산업,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다시 일으킨다’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김선교 위원 그래서 해수부의 전향적인 검토에 일단 환영의 말씀 드립니다.

담수를 사용하는 내수면 양식은 해수면 양식보다 첨단기술 접목이 수월하고 기후변화 등의 변수와 관계없이 지속가능한 어획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김선교 위원 정부가 내수면산업을 유통·가공산업과 레저·관광산업 등을 융합해서 지

역 특성을 반영한 첨단 고부가가치 양식산업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좀 책임감 있게 이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K-강마을 사업이라는 테마로 지금 진행 중인데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업무보고 8쪽에 있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 무엇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우선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선교 위원 예, 짧게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기존의 양식장에 대한 지원 플러스 관광으로 지역주민들이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김선교 위원 그래서 이제 세 곳 정도 지정을 한다 그랬어요, 보니까. 그렇지요? 2028년까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김선교 위원 한 곳당 얼마 정도 예산 지원할 예정이에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올 11월까지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기획에서 얼마 정도를 담아야 이런 것들을 실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은 용역이 끝나고 나서 아마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럼 금년도에 보고가 되겠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김선교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업계 있지요? 그러니까 내수면 양식에 있어서 단일 허가제 및 정확한 생산 통계 산출의 필요성 그리고 의무자조금 활성화 제도 도입과 관련 단체 연합회의 활성화 또 양식장 전용 허가에 대한 규제 완화, 스마트 양식장 도입, 내수면 유통산업 활성화 대책, 내수면 어종에 대한 양식 기술개발 등 안이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제기한 바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작년에 내수면 양식 업체들이랑 긴밀한 소통이 있었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렵지만 제가 추진을 할 테니까 회장단하고 간담회 할 용의가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 관련된 것들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선교 위원 해수부장관님 비서실하고 조율을 해 가지고 한번 간담회 일정을 잡을 테니까 동의 좀 해 주십시오. 가능하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김선교 위원 또 우리 경찰청장님, 해양경찰청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해수면 수상레저 사고도 문제지만 내수면에서도 수상레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특히 공간이 제한되고 그 안에서 여러 명이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다 보니까 싸움도 나고 민원도 많습니다. 실제 제 지역구가 있어요, 양평하고 남양주시 경계에. 먼저도 그런 사고가 나서 해양경찰청에 단속 관계를 좀 해 달라고 요청한 바도 있어

요. 알고 계시지요?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예.

○김선교 위원 알고 계세요?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이런 문제, 본 위원이 지난 2022년 해수부장관님 또 해양경찰청장님과 함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계류장에서 150m 이내 구역에서는 인위적인 파도를 못 일으키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150m 근접까지 오거나 그걸 넘어와서 일부러 더 큰 파도를 일으켜서 피해가 더 심각하게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름 행락철이 이제 다가오는데요. 미리 좀 적극적인 단속을 해 주실 수 있도록, 그리고 사전에 한번 우리 청장님께서도 제가 요청을 할 테니까 관계자를 교육을 한번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용의가 있지요?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예, 내수면에서도 수상레저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게 관리하고 성수기 이전에 지자체와 준비를 해서 성수기 때 적절하게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주 위원 경기 화성갑의 송옥주 위원입니다.

저는 무책임한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국민만 피해 보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장관님, 대왕고래 프로젝트 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알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지난해 6월에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 1호 안건으로 대대적으로 기자회견을 했고요. 또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이 삭감이 돼서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이유로까지 꼽힌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사실은 대국민 사기극임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업은 실효성에도 문제가 있고 예산도 1200억 원이 넘게 소요돼서 지금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이 사업과 관련돼서 시추 전부터 전문가들은 이 시추의 성공 확률이 10%에 불과하다 그리고 화석연료 시장이 국제적으로 퇴출되고 있는데 역행하는 정책이다, 또 시추 작업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이라든지 직간접적인 어민들과 어업의 피해가 상당히 크다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해수부와 관련된 부분들은 직간접적인 어업 피해, 어민 피해인데 장관님은 이 사실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지금까지 피해 정도는 산정이 안 돼 있습니다마는 그 전체 과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이게 보니까 특별하게 어민 피해 중에서 포항의 홍계잡이 어민들의 타격이 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언론을 검색했더니 ‘홍계도 달아났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참사 어민들 보상은 막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사만 난 거지 실제로는 더 피해가 훨씬 많은 것 같고요.

구룡포연안홍계선주협회의 소속 어민들이 32명이 있습니다. 연간 피해가 한 5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고요. 일부 어민들은 조업을 지속하기 위해서 사채까지 동원해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해수부에서는 이 상황이 파악되고 있나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내용에 대한 것들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보고만 받고 있다, 이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해수부와 석유공사의 대응은 매우 미흡한 그런 상황이고요. 어민들은 즉각적인 보상과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시면 석유공사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한 어업 피해보상 대책을 담은 내용입니다. 아주 대책은 1, 2, 3으로 해서 제대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대책에 대해서 장관님은 보고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보고뿐만이 아니고 국감 때 위원님들께서 또 지적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송옥주 위원 들여다보기만 하시고……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지금 실패했다고 하고 있는데 그 후속대책에 대한 건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민들께서는 이 부분들이 정부가 장난을 하고 있는 거다, 서로 책임 전가하고 이렇게 번지르르하게 보상 대책만 하고 있고 실제로는 뭐가 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석유공사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피해보상을 위한 용역조사 등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라고 합니다. 알고 계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피해 산정을 위한 용역 준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중이에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석유공사에서……

○송옥주 위원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중단한 상태다라고 하는데 중이 확실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용역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

○송옥주 위원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체크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해수부와 관련된 것은, 이 사업은 해수부의 사업이 아니지만 어민과 어업 피해와 관련된 부분들은 해수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요.

또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외에 후속 프로젝트가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세요, 우리 장관님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5개 정도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그러게요. 보니까 마귀상어, 오징어, 명태뿐만 아니라 3개가 더 있어서 6개의 후속 프로젝트가 지금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와 관련돼서도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와 관련된 권한은 해수부에 있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송옥주 위원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돼서도 해수부가 아주 전격적으로 공유수면 사용 허가에 대한 부분들을 허가해 준 부분들이 있는데, 석유공사가 어민과 어업에 대한 후속조치 대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보상 관련된 부분들이 되지 않으면 추후에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에 허가 취소를 하는 등 강력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을 하고 싶은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대왕고래도 조건부 허가를 내 준 이유가 어민들을 일차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석유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더 살펴보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그냥 살펴보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알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해수부의 주 책임이, 오늘 업무보고 1번 2번 3번 4번 해서 여러 가지 있지만 어민과 어업과 관련된 생활환경도 개선하고 살맛 나는 어촌마을을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제가 제1순위에 있는데 이 어민들에게 보상과 제대로 어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수산업과 해양 생태계의 보호를 주무부처로 하는 그런 해수부여서 어민 입장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하고요.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빨리 대책을 마련하고 혹시라도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예방적인 대책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 장관님, 기후위기를 실감하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이양수 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 교과서에서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대구에서 사과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철원·화천·양구·인제 사과가 몇 배 이상 생산량이 급증할 정도로 그렇게 되는데 바다는 훨씬 심각하더라고요. 진짜 예전에 명태 안 나오는 것, 설악산에 눈이 안 오면서 명태 안 나오는 것은 오래된 일이지는 하지만 최근에는 수온 때문에 어종이 막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사실 겨울이면 동해안 지역에서 도루묵을 생산해서 어민들이 많이 의존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온난화 때문에 해초들이 백화현상 겪으면서 도루묵들이 산란할 데가 없으니깐 도루묵이 안 나 갖고 아주 그냥 어민들이 정말 기름값도 못 뽑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종이 도루묵이 안 나오는 대신에 대구가 나와요. 그리고 방어는 옛날에 보지도 못했던, 제주도·거제도에 있던 방어들이 요즘 속초에서 많이 잡힙니다. 방어 축제를 이제 속초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럴 정도로 지금……

○문대림 위원 그게 안 됩니다.

(웃음소리)

○이양수 위원 그럴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어종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의 금어기가 지금, 거제도가 원래 대구 산지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금어기가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이었거든요. 그런데 동해안 속초 이쪽은 산란기는 아직 안 됐는데 금어기가 설정이 된 거예요. 그 전에는 대구가 안 나오니까 금어기가 1월 중순이든 2월 중순이든 신경을 안 썼는데 한창 대구가 잡히고 산란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거제 지역에 맞춘 금어기가 실시되니까 어민들이 아주 엄청나게 시름이, 눈 앞에 보이는 대구를 잡지 못하고 그물에 걸리면 그냥 다시 놔 줘야 되고 이러니까 안타까웠었는데 정말 이번에 해수부가 아주 기민하게 어업인들의 사정을 이해해 주셔서 어업 규제 완화 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장관님이 더 잘 아시겠지요, 장관님이 직접 하신 거니까.

그래서 이 금어기를 완화해서 보름만 일단 금어기를 실시하고, 어민들한테 2월 달에

대구를 잡게 해 주고 3월 달에 금어기를 합니다. 3월 달에 하면 그때가 산란기가 맞아요, 이 동해안 쪽은. 그래서 어민들 생계에 큰 보탬이 됐고. 도루묵 안 나오고 되게 어려웠는데, 다들 입에서 탄식만 나왔는데 대구 때문에 오히려 지금 그 지역에 활기가 굉장히 생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장관님과 또 해수부 공무원들한테, 제가 전화 한 통 했더니 밤새 잠 못 자고, 최현호 국장 이런 분들 정말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고마운 건 이 한 번에 끝날 것이 아니고 바다 상황이 이러니까, 기후변화라는 게 이렇게 되니까 해수부 정책을…… 사실 그런데 이것 한번 바꾸는데, 이것 시범사업하는데 되게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기후변화, 온난화가 심각해지니까 금어기를 결정하는 것 이런 것을 해수부에서 유동적으로, 바다에서 고기떼가 오고 가고 하는 것이 사실 수온 0.1도, 0.2도, 0.5도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어기를 지금처럼 딱 법으로 정해 놓고, 시행령으로 정해 놓고 움직이지 못할 것이 아니고 좀 넓게 ‘1월부터 3월 중에 얼마 정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유동적으로 이것을 실시하는 것이 어민들에게도, 지역경제에도 그리고 현실에 맞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어업인들과 기민하게 같이 움직이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어민들한테 그런 것들을 받아서 정책을 기민하게 하는데 장관님이 막 하고 싶어도 법과 규정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이양수 위원 법과 규정을 그렇게 미리 만들어 놓으셔야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이양수 위원 그 작업을 이번에 고생한 최현호 국장을 비롯한 담장 직원들뿐만 아니라 장관님이 관심 갖고 거기에 애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적극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다음 업무보고 때까지 그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그리고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폐업지원금에 대한 건데요. 감척사업은 폐업지원금하고 매입지원금으로 구분하는데 매입지원금은 일정하게 있습니다만 폐업지원금은 순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0입니다.

딱 5분만 하나요, 1분 더 주실 수 있나요?

○위원장 어기구 5분.

○이양수 위원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죄송합니다. 오전에 5분씩 딱 드리기로 돼 있어서 오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 윤준병입니다.

2025년도 농해수위, 특히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또 항만공사 등 업무보고인데 금년

한 해도 해수부를 비롯한 공직자들이 좀 더 분발해서 정책 비전으로 삼고 있는 민생의 온기를 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해양수산 또 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 이것 제대로 만드셔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 봅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잘 들었는데요. 물론 나름대로 금년 한 해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지만 지난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요청했던 내용들이 부분적으로 잘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해 드릴 테니까 그 내용들 다시 한번 챙겨서 제대로 업무가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수산물 할인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게 유통업체의 매출 향상에 기여하는 것보다 어업인의 소득 향상, 소비 촉진 이런 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달라고 했는데 그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운영할지 이런 내용들이 반영되지 않았어요.

또 해양쓰레기 저감 대책과 관련해서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의 가동 또 해양폐기물 재활용 방안 발굴 또 수거비용의 국비 지원 확대 이런 내용을 주문했는데 그 내용도 빠져 있습니다.

어업청년임대사업과 관련해서 원인을 파악해서 문제 해결을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아직도 용역이 끝나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 부분도 제대로 점검해야 될 것 같고요.

새만금 신항과 관련해서 순찰선, 청항선을 확보하고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하는 것 조기에 해 달라 이렇게 요청했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도 업무보고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또 현안으로 보고해 주셨던 해양사고 인명 피해 저감 방안, 이 내용 보고해 주셨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어업인들의 안전불감증, 행태 변화 이것을 어떻게 빨리 만들어 내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또 김 유통질서 관리 및 지원 방안 내용 중에서도 현재 가장 현안이 돼 있는 질의를 동료 위원님들께서 하셨습니다만 물김 대책과 관련된 내용이 결여돼 있다, 이 점 지적하고요.

해경 내용에는 일하는 조직 문화 이렇게 만들어 내겠다 돼 있는데 ‘누구나 질문’이라고 하는 민주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와 있는 질문 내용 보면 해경 급식비하고 해군 급식비하고 대비해 보면 해경 급식비가 해군 급식비의 절반밖에 안 된다 이렇게 지적돼 있어요. 인지하고 계시지요?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고 그 대책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이런 의견 제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지금 제시가 안 돼 있어요.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수광양항만공사 업무보고 내용에 여수세계박람회장 정부 선투자금 3658억 원 일시상환 요구, 지난해 추경 하려고 하면서 이 부분 유예하려고 했었는데 이후에 하여튼 과장 안 됐어요.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박성현 예.

○윤준병 위원 그러면 현재 야기되고 있는 문제가 뭐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대



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업무보고 내용에 반영해 주셔야 되는데 모두말씀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하고 업무보고 내용 보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실제 업무보고하는 내용이 제대로 내실 있게 작성이 안 돼 있다 이런 반증이라고 저는 봅니다.

각 기관들 공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 한 해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들 제대로 챙겨서 추진하시되 예전에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한 내용들이 결여된 부분들 제대로 챙겨서, 지금 자료를 못 만들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구두로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24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은 글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래요.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진 위원** 장관님 반갑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문선 군자행을 보게 되면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장관님, 의심받을 일을 하지 말자 이런 얘기지요. 최근에 최상목 대행께서 고위 경찰간부의 인사를 또 단행했어요.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런데 뒷말이 무성합니다. 아직까지 끊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아쉽게도 우리 해수부에서도 유감스럽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없다?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부산항만공사 사장 임명과 해양경찰청장 제청을 했지요, 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해경청장 제청을 했습니다.

○**이병진 위원** 항만공사 사장은 아닌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해수부장관이 임명하는 자리입니다.

○**이병진 위원** 그렇지요. 임명과 제청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과전불납리하고 이하부정관을 거론한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내일이면 모두 끝나고 판결만 남은 상황입니다. 60~70% 사랑하는 국민들이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 법리상으로도 인용이 거의 명약관화한 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신중한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할 시기다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시기적으로 적절했나요, 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고민을 많이 했고요. 어선 사고로 인해서 인명 피해 나는 것은 시간으로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공급망에 대한 걱정 또한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를 매우 많이 고민을 했고요. 적절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병진 위원** 저는 장관님의 평소의 업무 처리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 비판적으로 봅니다. 다행히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유로운 입장이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인사에 개입하는 모양새로 비춰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물론 외부적으로 그분들, 두 분 경험과 커리어를 저는 존중합니다. 그런데 큰 파고를

넘나드는 이 시점에 자중하고 신중한 행보를 보여 줘야 할 정부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해수부를 앞세워 가지고 이례적 인사 조치를 행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지을 수가 없습니다.

장관님, 제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어선 사고 그다음에 불법 조업 대응, 트럼프 2기 행정부 이 3개가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였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런데 지난 3일에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원장에 전재우 전 해수부 기조실장을 임명하셨어요. 그리고 1급 실장 인사도 단행을 하셨고.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인상을 제가 지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아끼는 우리 장관님의 처신에 더욱더 아쉬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 장관님께서 깊이 새겨들어야 될 그런 문구가 아닌가 싶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만이 있는데, 항만이 멀쩡해. 그런데 배가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항만이 있다, 없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배는 들어오는데 조금 허약한 것은 현장 가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래요, 바쁘신 와중에도 직접 왕림해 주셨는데.

평택항 신규 국제여객터미널을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컨테이너장치장 부족이라든지 여러 운영사들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정상 운영에 참여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리고 승객들은 셔틀버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불편이 나날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7일 날 다녀가셔서 현장을 직접 보셨는데.

2074억이 들어갔어요. 상당히 큰 금액이지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이병진 위원** 장관님 재임 기간의 큰 치적인데, 저기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우리 평택항 국제터미널이 이렇게 크고 현대화돼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속 빈 강정이다. 그렇지요? 속 빈 강정이 돼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현장에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운영 절차라든가 그다음에 정상화에 대한 부분들은 시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래서 내용을 채우는 나머지, 소위 비전 선포식이라든지 어려울 때 국민과 그리고 지역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하여튼 지역하고 시기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번 얘기를 해 봐야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확답드리기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 있다는……

○**이병진 위원** 확답하셨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게, 검토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지 하겠습니까라고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이병진 위원 저는 확답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위원 반갑습니다. 울산 남구갑의 김상욱입니다.

수협중앙회 회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상풍력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해상풍력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주민 수용성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수협들도 시끄러운 곳 있지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예.

○김상욱 위원 수협 입장은 어떻게습니까? 해상풍력사업을 할 때 주민 수용성의 주민은 어디까지인가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주민은 어업인이 당사자 아닙니까. 거기까지지 그 이외의 사람이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안 맞습니다.

○김상욱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울산 앞바다 해상풍력을 한다. 그러면 울산 지역 어촌계만 주민인가요, 아니면 울산 앞바다에 조업하는, 예를 들어 인천 어선이 왔을 때 여기도 주민 수용성 대상인가요, 아니면 수협 조합원만 주민 수용성의 주민에 들어가는 건가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어업을, 그 영역 안에 조업하는 사람 그리고 해상풍력이 들어옴으로써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도 일부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겠지요.

○김상욱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결국 개념이 모호하지요. 그렇지요? 모호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해상풍력 사업지마다 다 난리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예.

○김상욱 위원 어촌계에서 전부 싸움 나고 어민들 간의 불화와 갈등이 지금 계속해서 격화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예.

○김상욱 위원 지금 해상풍력 관련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이번에 기획을 하셨던데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주민 수용성에 관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아직 녹아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민 수용성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저희 울산 같은 경우도 엉망이거든요. 울산에 있었던 일 같은 경우도 주민 수용성을 대표할 수 없는 일부 어선 단체들이 나서서 본인들이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발전사와 밀약을 체결하고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다른 어민들이 그걸 알고 이게 무슨 것이냐 합니다. 실제로 라이다를 설치하거나 또는 해상풍력 본사업으로 들어가 버리면 피해를 보는 것은 어민들이지 않습니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예, 맞습니다.

○김상욱 위원 그런데 그 어민들과는 실질적으로 합의를 한 것이 없어요. 그렇지요? 이렇게 모럴 해저드 같은 일들이 어촌계에서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어촌계에 있는 여러 단체들 간에 서로 갈등하고 서로 싸우고 있어요, 누가 주도권 있느냐, 누가 주민 대표성

을 가지고 있느냐 하고. 알고 계시지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예.

○김상욱 위원 제 생각에는 수협 입장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협이야말로 어민들을 대표하는 단체지 않습니까. 어민들을 대표해서 각 어촌계랑 다 소통하고 계신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주민 수용성 문제, 이제 앞으로 해상풍력사업이 본격화되면 될수록 주민 수용성 문제가 점점 더 시끄러워질 텐데 결국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어민들 간에는 분열하고 갈등하고 거기서 부패가 자라나고 사업은 사업대로 제대로 되지 않고 엉망인 상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수협의 관심을 조금 요구하고 싶고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많은 어민단체들이 있지요. 서로가 대표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돌하고, 누가 대표단체인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사실 공식적으로 제대로 된 대표성을 띤 곳은 수협밖에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수협에서 어촌계랑 상의를 하셔서 가지고 이런 부분 교통 정리를 지역별로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특히 올해 이 부분을 풀지 못하면 해상풍력사업이 가면 갈수록 더 복잡해질 것 같거든요. 빨리, 지금도 늦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관심 가져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요.

해양경찰청장님, 질의드려도 될까요?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상욱 위원 같은 취지인데 일부 발전사들, 특히 해외 발전사들이 어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어민단체들과 따로 만나서 돈을 주고 여론을 조작하고 또 어민 대표성인 척하고 이것 때문에 다른 어민단체가 고소 고발한 사건들이 있습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제가 인지하고 있는 사건은 없습니다.

○김상욱 위원 예전에 있지 않았나요? 울산에서도 있었는데.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말씀하신 부분 살펴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위원 울산에서 있었던 사건 같은 경우는 어민 대표성이 없는 단체가 어민 대표성이 있는 것처럼 해서 발전사들로부터 돈을 수집역을 받았습시다. 뒤늦게 어민들이 알고 우리의 권리를 네가 왜 팔아먹느냐 하고 난리가 났어요. 어민 간의 싸움이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해경에서 뒤늦게 수사가 시작됐는데 이런 합의에, 이것은 의혹에 불과합니다만 당시 지방자치단체까지 개입을 해서 서로 간에 연루가 돼 있다는 의혹도 일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민들 간의 분쟁이 계속 이어져서 서로 단합해서 같이 어로 활동을 해야 되는 분들끼리 맨날 싸웁니다.

그리고 해상풍력 관련해서 수협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나가는 배나 지나가는 단체도 다 관련이 돼 있다 보니까 엄청 복잡해져요. 예를 들어 울산 앞바다 해상풍력을 한다……

1분만 더 써도 될까요? 안 됩니까?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이게 밤에 핸드폰으로 찍은 것이어서 영상의 질은 좀 떨어지는데 저게 다 청어입니다, 청어. 그러니까 배에서 찍은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근해에서 조업해야 할 배가 동해 연안에 들어와서 청어 싹쓸이를 한 겁니다. 수송선에 싣지 못하니까 이걸 밤에 가면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근해로, 그러니까 연안으로 물고기들이 떠내려왔고요. 당시 사람들은 이게 혹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연관되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많이 샀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어민들은 이것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이런 물고기들이 폐죽음을 당한 게 떠내려왔는지.

근해에서 조업해야 할 배가 연안에 들어와서 조업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상도의상 맞지 않는 거지요. 연안 어민들은 어획량 감소와 생계 위협 호소하면서 지금 수십 년째 해수부한테 이것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7년도부터 경상북도하고 강원도 연안선망어업인들이 수심 차례에 걸쳐서 동해안 연안에 5500m 조업 금지 요청을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해수부가 아직까지 어떤 조치들도 취하고 있지 않아요.

자료화면 보시면, 17년도부터 이것 건의를 한 거예요.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7에 보면 동해안 근해 소형선망어업 조업금지구역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화면 보세요. 근해어업에 소형선망어업의 조업 금지가 지금 제주도의 본도 주위 7400m 이내 해역은 금지가 되어 있는데요. 서해안에도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동해안에는 금지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해 어선이 동해안에 와서 싹쓸이를 해 가는 거예요, 연안에 와서, 근해 어선이 연안에 들어와서. 연안 어민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것 시행령 개정해 달라라는 겁니다. 매번 이야기를 했더니 해수부에서 하는 말은 이거예요. 어업분쟁조정위원회 통해서 자율적으로 조정하면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위원회가 법적 구속력도 없고 실효성도 없고, 그래서 실제로 2018년도에 체결된 어업인 상생협력 협약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수부가 결단을 내리면 되는 문제인데 안 하고 있단 말이지요.

저희 사무실로 포항·영덕·울진·삼척·고성 이쪽의 어민들이 다 찾아왔어요, 동해안 벨트 죽 해 가지고. 호소하는 것 하나입니다. 동해안에도 연안에는 연안 어선들이 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금지구역을 설정해 달라, 딱 이것 하나예요.

그런데 이런 사례가 없느냐? 시행령 개정한 적이 없느냐? 아니예요. 2022년도에 경북 울진의 근해통발어선하고 강원도 삼척 어선 간에 대게 조업과 관련해서 분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경북 연안에서는 1년 내내 대게 조업이 금지됐었는데 강원도 연안에서는 일부 기간만 조업이 금지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경북에 있는 배들이 강원도 올라가서 조업활동 하는 거예요. 강원도 사람들이 못살겠다고 얘기하니까 22년도에 해수부가 이것 직접 개입했어요. 그래서 대게 조업을 위한 통발 사용을 연중 금지한다라고 집어넣었어요. 시행령을 개정했어요. 이것 해 주셔야 합니다.

해수부장관님, 이것과 관련해서 해수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계

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업종별로 규모가 틀린데 조업구역에 들어와서 저렇게 자원을 획득하는 것에 대한 것들은 제가 봤을 때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게 법이라면 우리가 해 보겠는데 이걸 시행령이에요. 장관님 결단만 남아 있는 겁니다. 이것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거기다 남해에 소재지를 둔 근해어선들이 동해안까지 올라와서 동해안의 어족자원을 싹쓸이해 가고 그것도 수송할 수가 없으니까 가는 길에 다 버리고 가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요.

장관님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다음은 서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호 위원** 장관님 수고하십니다.

제도개선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식업권 공유자 권리 행사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서 양식업권은 물권이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서천호 위원** 물권으로 돼 있고 민법의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는데, 다만 담보 제공 금지, 임대차 금지 등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또 기본권과는 달리 양식업권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그 지분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한을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초기 개인이 투자한 부분들이 사실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천호 위원** 제가 자료를 말씀을 드리면, 공유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자산이나 신용, 기술을 공유를 한다는 입장이 있고 일반 공유자의 처분이 있으면 국가공유자원인 어장의 기능을 상실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한한다는 취지로 제한을 해 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23년 기준 바다양식 면허를 보니까 9996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실제로 이런 중요한 이유로 제한을 했다고 한다면 수협이나 해수부에서 양식업 공유 현황의 파악이 돼야 되는데 파악조차도 안 돼 있어요. 그렇다면 법 제도 취지와는 다르게 행정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법 제정 당시의 소위 입법 목적과 지금 환경이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면 특히 어업 노동력이 노령화돼서 실질적으로 어민이 양식업을 할 수 없는 특수 상황이 있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의 권리도 지금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 이걸 우리 의원실에서 법안을 제출할 겁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천호 위원** 두 번째입니다.

업종별 수협 어업권 임대차 관련입니다. 전체 정치망어업 현황을 보니까 전국에 475건입니다. 어촌계 지구별 수협이 소유한 면허는 임대차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업종별 수협이 소유한 어업권은 소속 조합원에게 임대차가 불가능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해수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입법 불비라고 그래요. 그러면 알고 있었는데 왜 이게 수정이 안 됐나 그리고 법 제정 당시의 기록을 보니까 전혀 특별한 입법 취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구별 업종 또 어촌계 조합과는 형평성 문제도 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천호 위원** 세 번째입니다.

업종별 수협이 해산 사유에 관한 부분입니다. 수협법 84조, 108조, 113조에서 보면 조합의 해산 사유로 조합원의 수가 일정 수 미만일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구별은 100명, 업종별 15인, 수산물가공 수협의 경우에는 7인 이하일 경우에 조합을 해산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지금 실제로 수산업·어업 현장을 보면 수산자원 어획량도 감소하고 있고 어촌의 고령화 문제, 그래서 조합원도 실질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러다 보면 대형선망 등 업종별 수협의 경우에는 15인을 지키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수산물가공 수협의 해산 기준인 7인 이하로 일단 하향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입법이 발의돼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발의돼 있습니다.

○**서천호 위원**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은 농협은 99년도에, 산림조합은 1980년대에 관련 규정이 개정이 돼서 사실상 전연 제한이 없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유사 조합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해수부에서,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일선 수협 의견 수렴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천호 위원** 다음은 2차 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지금 12시가 넘었는데요. 오늘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질의 시간을 드리려고 했는데 간사님들께서 오전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식사하고 다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나는 꼭 오전에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전에 꼭 하셔야 되겠다……

○**주철현 위원** 제가 지금 해야 되겠는데요.

○**위원장 어기구** 주철현 위원님, 꼭 하셔야 되겠다는……

○**이원택 위원** 오전에 꼭 해야 하실 위원님들은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어기구**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면 오후에 속개해서 질의를 하고.

그러면 오전에 저는 꼭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

○**조경태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예.

○**조경태 위원** 그러면 오후에 하는 대신에 시간이 5분은 너무 짧거든요. 그러니까 1·2차를 합쳐 가지고 한 10분 정도로 또는 7분 정도로……

○**위원장 어기구** 원래 오후 질의, 보충질의는 7분이 이렇게 예약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이원택 위원 5분, 7분, 3분 이렇습니다.

○조경태 위원 그러니까 5분으로 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7분 정도로 해 가지고……

○위원장 어기구 10분?

○전종덕 위원 아니요, 5분하고 7분 두 번 다 하신다는 거예요.

○조경태 위원 그런데 5분으로 하니까 이게 질의가 끊어지니까……

○이원택 위원 그건 위원님 편안하게 운용하시면 여기서 수용하겠습니다. 편하게 판단 하십시오.

○위원장 어기구 위원님들 제안하시면 10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예.

○위원장 어기구 오전에 꼭 하셔야 되겠다 하시는 위원님 안 계시면 정회를 잠시 했다가……

(「오후에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이원택 위원 주철현 위원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주철현 위원 오후에 하는 사람 5 플러스 1로 하십시오. 그 정도 해 줘야지.

○위원장 어기구 오후에는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14시에 속개하여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어기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예, 의사진행발언.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지난해에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한 135금성호 사고 관련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과 경찰청장님 두 분 같이 들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사고 당시 금성호 어획량, 유류량, 그물의 무게, 그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양, 진수량 등 결괏값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주고받은 금성호 사고 관련 문서 일체, 선박 복원성 여부 등 결과 포함, 세 번째는 해양안전심판원 측과 주고받은 금성호 관련 문서 일체, 네 번째는 기타 금성호 사고조사 과정에서 해양공학 전공 교수 등 전문가분들에게 자문 및 자문을 얻었던 내용들, 회신 문서 일체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선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수사 중인 70대 운반선 선장을 제외한 피의자 등 수사보고서, 여섯 번째 금성호 구조작전 일지 일체, 일곱 번째 선사와 논의된 선체 인양과 관련된 문서 일체를 금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어기구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에 따라서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선 위원 장관님 이하 또 각 기관장님 이하 직원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장관님, 물김 폐기된 것 관련해서요 5989t인데 작년에 54t, 한 해 전체가 폐기된 내용에 비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양이더만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런데 보상 대책이 있습니까, 기준이나?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현재 보상을 포함한 전반적인 대책을 현장하고 김 산업협의체하고 같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하고 직접적으로 보상할 건지 간접적으로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과거에는 보상한 사례는 없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없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러면 폐기 비용만 지원해 줬던 겁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지금 상황에서는 전반적인 것들 보고 판단을 할 예정이고요. 근본적으로는 폐기가 안 되도록 하는 게 맞는데 폐기비용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임호선 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것보다도 존경하는 박지원 의원님께서 진도군에 가셨을 때 간담회를 하신 것 같은데 도하고 군하고 수협에서 각 17억씩 51억 원을 보상해 달라 이런 구체적인 요구가 나오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그런데 보상 기준이나 어떤 근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 지금 당장 발생한 문제도 문제지만 앞으로 유사한 것이 발생했을 때 대처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지요.

○임호선 위원 현장에서 계속 목소리가 나올 테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원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요구 중에 김 공장 증설 자금도 지원해 달라는 요구도 나왔던 것 같아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가공 공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호선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아마 여기 진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유사한 요구들이 계속 있을 것 같은데 힘드시더라도 이런 물김 폐기 현상이 일시적인 현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민들이 뭔가 좀 의지할 데가 있는 그런 정책이나 필요하다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험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공감합니다.

지자체, 수협하고 지금 적극 소통하고 있고요. 산업협의체를 통해서 올라오는 사소한 거라도 저희가 하여튼 챙겨 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관심 가져 주시고요.

앞서 오전에 존경하는 송옥주 위원님께서도 말씀 계셨는데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해

서 경제성이 없다는 판단 이후에 관련 부처 논의가 따로 있으셨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임호선 위원 없습니까, 그 이후에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임호선 위원 대통령실하고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에서 지금 앞으로 6개의 나머지 유망구조 추가 평가 등을 도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탐사를 계속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힌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것은 보도자료, 기사를 통해서……

○임호선 위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현재 저희까지는 안 와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런데 이게 어민들 입장에서는 이번 홍게 피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유망구조에 대한 탐사시추가 계속될 경우에 이런 부분들 문제들이 계속 더 발생할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관계부처 논의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시급성 때문에 그랬겠습니까만 간이해역이용협의서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간이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률 개정안도 냈는데 이런 경우에 간이해역이용협의서가 아니라 해역이용협의서를 제대로 했을 때 해수부 입장이나 어민 입장이 관철될 수 있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간이해역이용협의서의 법적 근거도 지금 사실은 없고 시행령에 위임만 돼 있지 사실은 그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임호선 위원 그래서 그 근거 조항을 법에다 두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은 간이로 갈게 아니라 진짜 엄격한 해역이용협의를 통해서 해수부 입장이나 어민들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전반적인 것들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앞서서 임미애 위원님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까마는 어업인들의 조업에 크게 수입원에 방해가 없도록 하는 조치들을 우선 현장하고 잘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또 관련 조치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현 위원 장관님하고 차관님 이하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김용진 해경청장님 축하드리고요. 아울러서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님께도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 다 자질이 출중하시고 훌륭하신 분들인데 축하는 드리되 지금 절차상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지만 지금 권한대행 체제이기도 하고 권한대행께서 정상적인 헌법과 법률도 안 지키면서 이상하게 일정한 기준도 없이 인사를 해요. 헌법재판관 임명 세 분 중에 두 분만 선별 임명하더니 또 법에 따라서 하게 돼 있는 상설특검후보 추천은 안고 지금 석 달째 몽그적거리면서도 또 이런 인사는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관성이 없고 헌법과 법률이 안 지켜진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장관님, 해경청장 임명은 어떻게 진행이 된 겁니까? 장관님께서 하시자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위에서 오더가 내려온 겁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제가 제청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어선사고 그다음에 불법 조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철현 위원** 제청을 드렸더니 대행께서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는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고려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지요.

○**주철현 위원** 그런데 아시겠지만 대통령이 계실 때는 청와대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추천위원회에서 부여한 공직후보자들은 다 검증 거쳐서 추천을 하거든요. 이런 일을 지금 누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 추천을 받으셨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추천이라고 하면……

○**주철현 위원** 사실상 다 청와대에서 아니, 대통령실에서 내정돼서 내려오잖아요. 이때까지 이게 인사 관행이었어요. 심지어는 항만공사의 본부장, 그 밑에 있는 단장급 인사도 다 청와대의 인사 파트에서 사전에 내정이 돼야만이 인사 절차가 진행이 되고 사람까지 정해져서 내려오는 게 관행이었거든요. 지금은 그걸 누가 하고 계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거는 지금 경찰에, 해경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절차가 있고요.

○**주철현 위원** 아니, 그것은 그런데 정해진 법적인 절차가 그렇고. 마찬가지로 항만공사 사장은 내부 인사추천위원회를 거쳐서 장관이 임명하게 돼 있지만 솔직한 말씀으로 장관님이 주도적으로 어떻게 인사 못 하잖아요. 다 대통령실에서 내정돼 내려오는 것이 관행이었고.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누가 하시냐는 말씀입니다. 이런 중요한 경찰, 해경청장 또 항만공사 사장 이런 인사 내정을 누가 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지금 전 청장 퇴임 이후에 이거는 진행이 돼 온 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어선사고라든가 불법조업에 관계된 사건들이 계속 터지면서 제청을 드린 겁니다.

○**주철현 위원** 알고는 있는데 이분들을 정하기를 누가 정했어요? 장관님이 정했다는 말 하지 마시고. 누가 정하신 겁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아니, 제가 정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주철현 위원** 허허, 참나. 그냥……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제가 제청드린 겁니다.

○**주철현 위원**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것을 계기로 해서 장관님이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아이,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고 그런 게 아니고 관행이 안 맞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대통령이 직무정지 중이지만 권한대행도 계시고 청와대 비서실이 또 살아 있는데 이걸 장관님 혼자서 정해서 임명했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장관이 제청을 하게 되면 권한대행께 가서 그거에 대해서 권한대행 쪽에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 봅니다만 아시겠지만 법무부를 통해서 인사 검증이 돼 있는 분들을 그중에서 세평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제

가 제청을 드린 거고 그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주철현 위원 대통령실에서는 별 말씀이 없으셨어요, 일체?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주철현 위원 그러면 이제야 정상적인 인사가 진행이 되는 거네요?  
좋습니다.

나머지 비어 있는 분들도, 지금 임기가 다 된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도 필요하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권한대행 체제이기도 하고 조만간 또 두세 달 내에 대선이 있을 것이 유력시 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중요한 분들의 인사는 좀 미루는 것이 맞다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거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김 문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무려 6000t이 지금 물김이 폐기가 됐는데 결국은 이게 가공시설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전체 물량을 보면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주철현 위원 1분만 더 좀 쓰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됐습니다.

○주철현 위원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작년에 2700t…… 여수 같은 데는 2700ha 중에 493ha가 허가가, 면허가 됐고 또 그 밖에 외해나 연구양식에도 500ha가 더 됐어요. 한 1000ha가 더 됐거든요. 이렇게 많이 허가가 되면 생산량이 과잉이 되고 당연히 이게 일정한 수확 시기는 집중돼 있으니까 가공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문제가 생길 걸 예상을 해야 되는데 해수부에서 예측 못 하셨어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상은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산지에 우리가 가공센터들을 만드는 것들 예산을 받아 놓고……

○주철현 위원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가공김이라든가 김의 어떤 유통 관리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예산은 받아 났습니다마는 병목현상과 같은 그런 것들이, 초도 물량이 생겼습니다.

○주철현 위원 장관님, 우리 여수에 1000ha가 지금 신규 허가가 됐고 면허가 됐거든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외해 양식에 대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철현 위원 여수에도 빨리 하나 지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주철현 위원 안 그러면, 여수는 가공시설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도와주십시오.

○주철현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태 위원 조경태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미국 워싱턴 D.C.를 다녀왔습니다, 한미의원연맹 회장의 자격으로. 초당적으로 야당에는 정동영 의장님이 또 회장으로 계십니다마는 같이 가서 미국의 정부 관리 그리고 상원 의원, 하원 의원들을 만나고 왔는데 제가 느낀 소회를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이 참 대단한 나라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국에 투자된 국가 중에 투자국 1위가 드디어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보다 기술력이 뛰어난 산업이 바로 조선산업, 원자력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저는 참 자랑스럽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런 선진 대한민국에서 불행하게도 비상계엄을 한 아주 치욕스러운 그런 대통령의 리더십을 보면서 참 부끄럽다, 참담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미국의 조야의 관계자들은 12·3 비상계엄을 ‘끔찍한 일이었다’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평가를 했습니다. 두 번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여야 정치인들이 머리를 맞대서 저는 개헌을 통해서라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빨리 개선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경태 위원 하여튼 잘 유념해 주시고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조경태 위원 우리가 선진 대한민국입니다. 그렇다면 선진국 수준의 항만을 재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동의하시지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습니다.

○조경태 위원 수십년째 방치되어 있는 다대부두, 감천항 이쪽에, 특히 다대부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부에서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이것을 친수공간으로 잘 개발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정부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리고 지금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도 수정계획에 지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조경태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2020년도에 발표했는데 지금 2025년입니다. 그렇지요? 절반이 지났는데 아직도 첫 삽도 뜨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조경태 위원 이런 것은 빨리 고쳐 나가야 된다. 선진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장점은 속도거든요, 속도. 계획을 했으면 이것을 실천해 나가는 실천력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경태 위원 그러면 지금 2025년, 이제 절반이 지났는데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따라서 전국 각지에 있는 도서 또는 항만이 있는 시설 배후단지를 지금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친수공간으로 개발하는 것을 언제쯤 시행에 옮길 계획입니까? 계획은 이미 세웠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런데 계획뿐만이 아니고 재개발에 대한 부분도 수정계획이

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의견들을 다 받고 그거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경태 위원 지금 부산항만공사 사장님 나와 계시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송상근 예.

○조경태 위원 사장님, 여기에 대한 용역을 지금 시행하려고 하고 있던데요. 맞습니까?

○부산항만공사사장 송상근 예, 맞습니다.

○조경태 위원 이게 지금 해수부에서는 지금 말씀드렸다고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있거든요. 항만공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부산항만공사사장 송상근 저희도 지금 용역을 해 가지고, 한 8월까지 용역을 짧은 기간 동안 해 가지고요. 또 다대 주민, 부산 시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경태 위원 여러분들 주신 업무보고 자료 19페이지에 보면요, 중간쯤 위치입니다. 지자체와 협업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중구, 동구, 영도구, 남구 들어가 있는데 사하구는 빠져 있어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송상근 예.

○조경태 위원 사하구에도 항만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다대항이 있고 감천항이 있고 그렇지요? 이거 포함을 시켜야 되겠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송상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예.

그다음에 북항 재개발에 대해서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산항만공사 사장님.

○부산항만공사사장 송상근 예.

○조경태 위원 북항 재개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일단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최근에 북항 재개발 관련해서 항만공사 전 간부가 안타까운 사연이 있지요. 스스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송상근 예, 알고 있습니다.

○조경태 위원 이런 일은, 저는 작년 국정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북항 재개발 관련해서 비리의 온상이다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한번 도표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의 요코하마 같은 경우에는 미나토미라이21이라는 이 프로젝트가 내나 항만 재개발입니다. 그렇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송상근 예.

○조경태 위원 항만 재개발했는데 여기는 지금 벌써 입주 기업이 무려 1930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 인원이 13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7700만 명이 찾아옵니다. 완전 성공한 케이스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부산 북항 재개발을 보시면, 한번 도표 보시면……

저 보십시오. 정말 부끄럽습니다. 선진 대한민국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안 됐지요. 지금

여기 일자리 창출된 기업이 있습니까?

○부산항만공사사장 송상근 아직은 없습니다.

○조경태 위원 없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송상근 예.

○조경태 위원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송상근 예.

○조경태 위원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부고속도로 아시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송상근 예.

○조경태 위원 그거 몇 년 만에 완공했는지 아십니까?

○부산항만공사사장 송상근 제 기억으로는 한 2년 반, 한 3년 그 정도……

○조경태 위원 2년 5개월 걸렸습니다. 그 엄청난 대규모 토목공사도 2년 5개월 만에 끝냈는데 이거는 20년째, 이 조그마한 영역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분만 더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1분 더 드렸습니다, 위원님.

○조경태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구역이 복마전이 돼 가지고, 비리에 얼룩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데 항만공사 사장님 새로 취임을 하셨으니까 북항 재개발과 관련해서 각오 한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항만공사사장 송상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미나토미라이 같은 거는 우수 사례, 해외 우수 사례를 저희들이 충분히 연구·검토하고 또 해수부와 충분히 상의를 해서 글로벌 우수 기업도 이렇게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덕 위원 해수부장관님, 앞서서도 보고하셨는데 최근 해양사고, 어선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 차원에서도 이 대책으로 24년도 5월에 어선 관리 대책을 내놨고 그리고 올해 2월에 어선사고 분석 및 인명 피해 예방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 대책을 내놓은 이후에도 오늘 보고하신 것처럼 37명, 34명 이렇게 인명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내놓은 대책에 대해서 탁상행정이다, 보여 주기 행정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부에서 내놓은 대책을 보더라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 규정을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많이 좀 아쉽고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강화해야 되는 대책을 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수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국제 기준에 부합해서 어떤 부분은 우리가 좀 잘하고

있는 데가 있고 또 우리가 많이 미달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는 부분은 잘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부족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히 구명조끼 대책으로 내놓지 않았습니까, 구명조끼 착용과 관련해서. 그런데 국제 기준은 일본이 국제 기준을 따르고 있어서, 국제 기준은 일본 사례가 국제 기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명조끼 같은 경우는 기상 상태와 상관없이 조끼를 무조건 입도록 했고 그리고 미착용 시에는 어업허가권을 정지시켰네요. 그런데 우리는 기상특보에 한해서 입도록 하고 그리고 미착용 시 과태료를 무는 것으로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부터 착용을 하겠다, 2인 이하 어선에 대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좀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 그러면 10월 달까지는 구명조끼를 안 입어도 된다는 거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작 전에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교육과 관련해서도 일본은 안전교육하고 직무교육을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전교육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역항이나 건설 수로 진입할 때 어선 충돌이나 좌초사고들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고율을 보니까 전체 사고율의 35%에 달하더라고요.

그러면 복원성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는 24m 이상에서 20m까지로 좀 더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국제 기준은 12m입니다. 우리는 너무 좀, 국제 기준에 상당히 미달한 것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사고가 발생하는데 우리는 국제 기준도 한참 미달하는 대안으로 이 사고를 방지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강화된 대책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관련해서 장관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사고 관련해서 우선 실종자 가족분들께 또 심심한, 장관 입장에서 굉장히 괴로운데요.

○전종덕 위원 그건 말씀하셨습니다.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래서 주셨던 말씀 중에 굉장히 좀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잘 담아서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해양사고와 관련해서 안전 기간에 점검하는 게 아니라 상시적 점검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해수부에서는 안전점검 기간에만 점검을 하고 있다 보니 사고를 방지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시적 안전점검을 통해서 해양사고 줄일 수 있도록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올해 어선원안전감독관 100명 이상을 저희가 요청할 예정입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전종덕 위원 알겠습니다.

장관님, 다른 질문 또 하겠습니다.

항만개발사업 지금 잘 진행되고 있으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종덕 위원 항만개발사업 관련해서 특히 부산항 북항 1단계 개발 공원 시설물이 관리청이 부산항만공사에서 부산광역시로 이전되고 공원이 전면 개방되었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전종덕 위원 그런데 공원이 전면 개방되기 2개월 전에 중금속인 비소와 불소가 검출됐습니다. 이것 1급 발암물질이고 비소의 경우는 기준치 대비 3.5%, 불소는 기준치 대비 1.7%가 검출이 됐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알고 있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래서 부산 동구하고 중구에서 토양정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내렸지요?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전종덕 위원 그래서 부산항만공사는 공원 토양정화를 위해서 환경개선공사를 1100만 원을 들여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2년 내에 정화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이 오염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출입 통제도 없었고요. 그리고 토양오염에 대한 안내문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위험 주의를 당부하는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들 않았던 거예요. 주민들이 산책하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가족들이 운동하는 공간에서 중금속이 나왔는데 정작 이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몰랐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시민들의 건강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 겁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종덕 위원 항만공사 사장님.

○부산항만공사사장 송상근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어쨌든 그런 사항이 생기면 앞으로 시민분들한테 충분히 고지도 하고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이것 지금 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사 측에서는 오염 면적이 2%밖에 안 되니까 미미한 것 아니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오염 면적 2%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무리할까요, 마무리? 그러면 제가 1분만 더 쓰고 나중에 2차 때 1분 덜 쓰겠습니다.

이것은 0.0002%가 나와도 아주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보니까 이 2%가 20피트짜리 컨테이너 55개 차량을 세울 만큼의 토양이에요, 흙이에요.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에게도 정확하게 안내하시고 또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그리고 토양정화대책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항만공사사장 송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리고 해수부에서도 이게 다른 개발사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서 재발되지 않도록 꼭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다음, 문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금주 위원 안녕하세요?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의 문금주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해수부장관님, 친환경수산물 직불제도 하고 직불금 규모도 확대하시고 개선을 좀 하셨어요.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작년 말에 보도자료도 내시고. 그래서 이 노력에는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 응원을 보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김 양식 현장에서는 오히려 친환경 인증 직불금 지원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라는 우려 또 불만이 나오던데 알고 계신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지원 어가 수가 많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문금주 위원** 예, 그것도 있는데 다음 표를 한번 보시면 배합사료 직불제는 지원 대상하고 범위가 확대됐어요. 그런데 김 양식과 같은 인증 직불제는 오히려 지원 규모가 축소가 됐는데……

과거에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양식장 면적에 비례해서 지급하던 것을 이번에는 인증수산물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던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신 물김 대량 폐기 사태와 같은 경우 친환경으로 김 양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가 되니까 직불금도 못 받고 판매 감소는 뭐 당연한 것이고.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판매실적은 입증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고 오히려 생산실적에 따라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던데 장관님, 좀 개선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불법 양식시설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재정 당국……

○**문금주 위원** 불법 양식장까지 제가 보호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재정 당국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불금 확대에 대해서요.

○**문금주 위원** 그러니까 판매실적이 아니라 김 양식장 하시는 분들, 물김 폐기되는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한다면 생산실적으로 바꿔 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최적의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다음, 어선사고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최근에는 어선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도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선사고로 발생한 사망·실종자가 2023년 94명에서 지난해는 165명으로 75% 늘어났고요. 사망자 수도 최근에 가장 많은 세 자릿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텐데 과거보다 먼바다까지 나가서 조업도 해야 되고 기상악화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운항 이런 부분들이 원인으로 제기도 되고 또 하나는 고령화되는 한국인 선원 그리고 외국인 선원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 안전불감증, 여러 원인들이 작용해서 그런 것 같은데……

오늘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주셨고 좀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구명조끼 착용 요건을 개정하셨어요. 조끼 착용 시에는 생존율이 80%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끼를 착용했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해양사고 사망·실종자의 81%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더라고요. 특히

어선에서 발생한 해양사고 사망·실종자 192명 가운데는 구명조끼 미착용자가 157명으로 81.8%에 달했습니다. 아울러 어선에서 추락해서 사망·실종된 50명 중에서는 48명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런 측면에서 개정안을 낸 것은 잘하신 건데 거기에 보면 태풍·풍랑 특보 또는 예비 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는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굳이 기상특보가 안 내려져도 사고가 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인 이하인 경우로 새로 개정해서 신설을 한 건데 기상특보도 좀 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평상시에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방향으로…… 물론 현실에서 선원들의 수용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안을 드리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입기 간편하고 효과 좋은 구명조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는 전략 가지고 재정 당국하고 열심히 하겠고요. 어선원안전감독관 투입하는 것도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그리고 각 지역에 보면 민간 해양구조대가 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자비로 하다 보니까, 드라이슈트라고 잠수복 같은 이런 것들 구입을 하는데도 비용이 많다 보니까 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좀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될 수 있게 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것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흠 위원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예.

○박덕흠 위원 해경청장님.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예, 해경청장입니다.

○박덕흠 위원 취임 언제 하셨지요?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2월 10일에 취임했습니다.

○박덕흠 위원 축하드립니다.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감사합니다.

○박덕흠 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요.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예, 바다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해 해경의 드론 구매사업의 공정성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저희 의원실에서 업체별 평가결과표를 자료 요청을 했는데 해경에서 업체별 총점만 제출을 하고 세부항목별 평가점수를 제출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것을 좀 빨리 제출해 달라고 독촉을 위원장님 명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어기구 자료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꼭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위원장님, 좀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어기구 그 자료제출 관련한 보고입니까? 말씀하십시오.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그 자료제출 관련된 사항은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상의 영업비밀로 저희가 자료제출은 어렵고 양해하신다면 의원실에 가서 별도로 설명하는 게 어떨까 건의드립니다.

○박덕흠 위원 그런데 업체별 총점만 제출했는데 굳이 항목별 평가점수를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위원장 어기구 그러니까 가서 위원님한테 소상히 설명해 드리고 서로 상의 부탁드립니다.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예,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흠 위원 앞서 문금주·전종덕 위원님께서 해양사고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많이 나쁠어요. 제주, 여수, 부안 등 잇따른 어선사고가 많이 나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박덕흠 위원 또 유독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했는데 아직도 구조 못 한 분들, 실종된 분, 못 찾고 있는 분이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박덕흠 위원 업무보고에도 보면 실종 인명피해 165명, 직전 5년 평균 대비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 현안보고할 때는 이렇게 대책이라고 다 내놓는데 그 대책이 이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똑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제주항공 사고 후에 보면 국토부장관 같은 경우에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책임지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 그런데 해수부장관님은 사고가…… 이것이 물론 여러 가지 기후조건도 있겠지만 우리 정부에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결국은 우리 장관님은 송구스럽다는 말만 되풀이하시는 것 같다 그리고 사고에 너무 안일하게 대응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지난주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했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박덕흠 위원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도 해양사고를 대비한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해수부가 마련한 대책을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계시는데……

해수부가 해양안전관리 총책임 부처지요, 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박덕흠 위원 그런데 저는 전혀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 아니냐, 결국은 보여 주 지식 대응을 하고 있는 것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고 의문이 듭니다.

화면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4년 5월에 해양수산부 어선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5월이지요. 당시 해수부가 마련한 어선 안전관리 대책이, 27년까지 인명피해 30% 이상 감축 목표로 이렇게 대책 발표를 장관님이 하신 겁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제가 했습니다.

○박덕흠 위원 또 거기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어선안전검사 대상·항목 확대 등 당시의 이 대책들 현장에 언제부터 적용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구명조끼는 올 10월부터고요, 개정안에 대한 부분은 올 1월 그다음에 작년 12월로 지금 진행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아니, 당시 대책들이 나왔으면 바로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올 10월이라면 지금 1년이 넘게 대책을 세워 놓고 하지도 않으면 그게 안전대책을 세웠다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장관님? 그렇지 않아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법안 개정 등이 좀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덕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여야가 다 합의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각심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보여 주기식 대응을 한다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화면 다시 띄워 주세요.

그래 가지고 25년도 업무보고에는 이렇게 또 바뀝니다. 2인 이하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복원성 검사 확대 등 이렇게 하는데……

다시 두 번째, 올해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 한번 띄워 주세요.

그다음에 PPT 3번 띄워 주세요.

이게 2024년도하고 2025년도 복원성 검사대상 확대, 25년도하고 이렇게 보시면 바람세기 테스트는 같아요. 그런데 지금 1년 사이 시행도 안 된 부분이 또 이렇게 고쳐집니다. 그렇지요, 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고친 게 아니라 12m는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요, 20m는 올해 해야 될 업무입니다.

○박덕흠 위원 아니, 지금 복원성 검사대상이 12m였으면, 오히려 6m로도 인명사고가 나 갖고 지금 저렇게 사고를 당하고 있는데 저게 10m가 되든가 해야지, 더 길어지잖아요, 어선길이가. 대책이.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기상 특보 및 인원 무관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도 다시 완화된 거예요. 왜냐하면 인명사고 나면, 아까 장관님 말씀하셨잖아요,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게 안전사고에 더 괜찮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더 완화를 해 가지고 2인 이상 배에만 착용을 의무화한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완화된 것은 아닙니다.

25년도에 이렇게 20m 이상 그다음에 2인 이하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기상 특보 및 인원 무관하게 착용 의무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겁니다, 계획에서는요.

○박덕흠 위원 인원 무관하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해야만 맞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맞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런데 여기에다가 2인 이하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이게 지금 맞다고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러니까 연차별 목표를 올해 지금 내놨다라고……

○박덕흠 위원 연차별은, 24년도에는 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연차별 목표입니까, 이게?

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래서……

○박덕흠 위원 시행하고 25년도에 다시 바뀌어야 되는 거지 시행도 안 해 보고서 또 대책이라고 내놓는 게 대책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재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수협중앙회장님. 중앙회장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예.

○위원장 어기구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선사고 관련한 질의가 많잖아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예.

○위원장 어기구 중앙회장님이 볼 때, 올해 특별히 선원들이 많이 목숨을 잃고 있지 않습니까, 겨울바다에서?

회장님이 보실 때 왜 이렇게 어선사고가 올해 특별히 많이 일어나는지 한번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 줄 수 있습니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한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첫째는 어선원들이 선원들이 안전교육을, 안전사고를 태연하게 느낍니다. 구명조끼 의무화하면 사고율 방지 충분히 하고 그리고 어업을 나가는 어업인들이 어구 적재화가 적당하면 사고율도 확실히 줄일 수 있는데 자꾸만 무리하게, 그렇게 안 하고 자꾸 무리하게 항해를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은 교육을 가지고, 하루이틀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장기플랜을 가지고 교육을 시켜 가지고 계속 누적되는……

결국은 사람이 돌아가시면, 불쌍한 어업인들만 피해를 보는데 그것 방지를 위해서 중앙회에서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민들의 의식구조가 달라져야 되는 것.

○위원장 어기구 예, 안전교육이 중요하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예, 그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또 이유는? 그다음 이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그다음에는 배를 운영하는 선주가 선주의 어선 생산량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게 수반돼야 됩니다. 과도한 욕심 때문에 10m 나갈 것을 20m 나가고 이래 가지고 자꾸 사고가 일어나고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래 가지고 많이 잡아 가지고, 아까 임미에 위원 말씀처럼 영역·구역에 안 들어와야 될 배들이 들어와 가지고 많이 잡아 처리도 못 하고 전부 다 버리면서 하는 이런 일들 때문에 과도한 어획량을 위해서 하는 것도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무리한 조합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전종덕 위원 다 어민 책임이고 행정 책임은 없습니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있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 얘기는 왜 안 하세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행정도 따라야지요.

○전종덕 위원 어민들만 책임 있네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예, 그런 구체적인 일들을 행정이 수반해서, 보완해서 따라 줘야지요.

○전종덕 위원 아이고.

○위원장 어기구 또 정부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 그런 말씀 없으신가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정부에 부탁하고 싶은 말, 제가 감히 뭐 중앙회장으로서 우리 어업인을 놓고 말씀……

○위원장 어기구 아니, 선원들이 지금 목숨을 많이 잃으시니까 중앙회장님이 정부한테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첫째는 안전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제도 받침, 거기에는 예산이나 기타 등등도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어선, 선박에 대한 복원력이나 기타 등등의 방법을 하는 데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나서서 한발 앞서서 많이 도와주시고 해 줘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어기구 지금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거친 파도, 요즘 겨울 같은 때 많이 출렁아요. 많이 추운데, 사고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달려가는 곳이 해양경찰 아닌가요?

청장님, 맞지요?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어기구 가서 이런 어선 구조 활동 하다 보면 해경에서 어려운 점이 뭐가 있나요, 대원들이 고생이 많을 것 같은데?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위원장님 이하 많은 위원들께서 항상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대원들이 목숨 걸고 일하는 환경에서 항상 필요한 것은 첨단장비들이고 또 구조 관련된 예산들이고 또 저희 대원들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항상 응원해 주시면 저희 대원들 더 열심히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꼭 해 드리고 싶고.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원의 고령화 문제도 있고 또 무리한 조업 또 기상 악화, 기후변화 이런 것에 대한 영향도 있을 것 같고……

○박덕흠 위원 대책만 만들어 놓고 실행을 안 하니까 그런 거지요, 대책만 계속 갖고 오니까.

○위원장 어기구 그런 문제를 잘해서 정말 안전시스템도 잘 점검하시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해수부에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감사합니다.

다음은 두 분 간사님들 질의가 남았는데요.

이원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PPT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사실 내란이 종식되고 해수부나 각 공무원들 전체적으로 본업에 충실해야 되는데 사실 12·3 계엄 이후에 내란을 선전하고 선동한 가짜뉴스를 뿌리고 있는 스카이데일리라

고 하는, 언론사라고 해야 할지 극단적인 집단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산항만공사 사장님.

○부산항만공사사장 송상근 예.

○이원택 위원 5·18은 DJ 세력과 북한이 일으킨 내란입니까?

○부산항만공사사장 송상근 저는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원택 위원 예, 한번 여기 봐 주시겠어요?

여기 PPT 보시면 5·18은 DJ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 이렇게 스카이데일리가 주장했습니다. 이것 100% 가짜뉴스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5·18에 참여한 사람들을 1번 광수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또 가짜라고 합니다. 이것 지만원 씨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게 스카이데일리가 보여 주는 실체입니다.

또 하나 넘겨 주시겠어요.

지난번에 여객기 참사 났을 때 방송사고가 있는데 그것을 대남공작설로 또 주장을 합니다. 참 기가 막힐 일이지요. 신문윤리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지요.

또 넘겨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세요, 이번 12·3 계엄 내란이 나고 난 이후에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 이것 대표적인 가짜뉴스지요. ‘중 부정선거 간첩단 일부 미 본토 압송’, ‘중 간첩단 미국 압송은 팩트’, 국가원로회 해 가지고 ‘중 전산조작 요원 90명 체포 미 정보요원에게 수사받는 중’, 마지막으로, 박선원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박선원 의원은 북노동당원 문재인보다 서열 높다 이런 기사를 써요.

넘겨 주시겠습니까.

이번에 서부지법 폭도 미화를 했습니다.

넘겨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세요, 김구 선생님을 어떻게 했느냐면 안중근의 동생 안공근을 토막살해 지시한 킬구 이런 식으로 희화화합니다. 일본인을 몇 명 죽이고 자국민, 우리 국민을 몇 명 죽인 김구 이렇게 희화화합니다.

우리 조선시대를 왕을 뭐라 그러면서 식민지화된 것을 우리 탓을 하고 있어요. 5·18을 또 저렇게 미화하고 있고 또 우측에 보면 여객기 참사 그다음 날 만평을 통해서 저렇게 희화화합니다.

또 넘겨 주시겠어요.

이것을 보니까, 농식품부하고 해수부 산하기관을 보니까 부산항만공사에서 400만 원을 지원했더라고요, 광고비로.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이게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늘어 온 거예요. 수목원정원관리원도 60만 원을 넣고요. 제일 많이 넣은 것은 2억 8000만 원 농협중앙회입니다.

스카이데일리라는 언론사가 실체가 약하고 규모도 없습니다. 언론의 홍보 효과의 실적도 없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어떻게 광고비를 요구했냐, 형식적으로는 자기가 무료광고를 다 막 내놓고 광고해 줬으니까 광고비 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것 고발하라고 그랬어요. 광고 요청을 안 했는데 본인들이 광고를 해 놓습니다.

장관님, 스카이데일리 언론 들어 보셨어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아니, 지원금은 오늘 처음 봤습니다.

○이원택 위원 동의를 되십니까, 이 언론사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지금 내용으로는 개인적으로는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이원택 위원 12·3 계엄이 일어났을 때 마치 중국인이 참여해서 내란을 선동하고 조작한 것처럼 스카이데일리가 여론을 조작한 겁니다.

저는 이 언론에 대해서 해수부나 관련 기관에서 앞으로도 광고비 요청이 올 것 같은데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

부산항만공사 사장님, 보고받으셨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송상근 예.

○이원택 위원 앞으로 저는 내란을 선동하고 가짜뉴스를 이렇게 유포하는 것은 엄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제가 정기적으로 각 산하기관들 광고비 지출내역을 제가 할 겁니다.

수협중앙회가 좀 있을 줄 알았어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그것은 안 합니다.

○이원택 위원 그랬더니 노동진 중앙회장님 없더라고. 아니, 농협중앙회가 저만큼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역시 노동진 회장님은 선견지명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런 내란을 선동하는 언론사에 대해서 저는 광고비 지출하면 공공기관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장관님, 그렇게 좀 지도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지도해 줄 수 있냐고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제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장관님 뜻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앙회장님도 잘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부산항만공사 사장님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 질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차 질의 마지막으로 정희용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경북 고령·성주·칠곡의 정희용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 질의부터 현재까지 나온 질의 내용들을 조금 짚어 보고 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기관장 인선 문제 또 어선사고 문제 또 물김 피해 문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스카이데일리 관련해서 어제부터 광고비 이야기가 계속 있는데 저는 스카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절대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광고비 집행내역을 언론사에 했는 게 옳냐 그르냐, 그러면 전 언론사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당 언론사가 잘못된 내용을 썼는데 광고비를 집행하는 게 옳냐 그르냐로 또 되고, 그 문제는 언중위를 통하

든 문제가 있으면 소송을 하든 해서 법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게 선행이 돼야 되고. 그런 근거가 있으면 부산항만공사에서 집행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냥 다른 더 좋은 것도, 보지를 알아서 제가 더 이상 코멘트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두 번째, 기관장 인선 관련해서 어제든 많은 말씀들 하시고 오늘도 많은 말씀들 하시는데 지금 장관님, 12월 3일 계엄 이후에 기관장 두 분 임명한 거지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님하고 부산항만공사 사장님하고.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정희용 위원 두 분 임명하셨고.

그러면 이 두 기관의 고유기능이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또 해양수산 분야의 연구개발사업 기획·관리 및 평가,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정희용 위원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만의 운영 또 항만배후단지의 관리, 국제여객 및 연안여객터미널 관리, 항만 개발을 고유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상계엄 사태가 있었다고 해서 이 법과 절차가 보장하고 있는 기관장 인선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저는 과도한 지적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도 원칙에 맞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임기가 끝나면 임명, 그 안에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되는 거잖아요. 그 절차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지 마라는 것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이 고유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무력해지는데 지금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야권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탄핵소추안 29건, 특검법 37건 발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일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은 전 국민이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관장 인선 문제까지 자꾸 이렇게 지적을 하면 제대로, 각 기관이 고유한 기능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법과 절차에 맞게끔 공정하게 절차를 준수해서 진행하시라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실기했을 때 기관이 어떻게 힘들어지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외 영향에 대한 것 잘 분석해서 소신껏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래서 그 설명을 충분히 충실하게 드리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정희용 위원 걱정하시는 위원님들께.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자료 보니까 유엔해양총회 유치를 지금 준비 중이신 걸로 들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습니다.

○정희용 위원 이게 그러면 유치 확정은 금년 12월에 되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유엔에서 확정이 되는 것이고요. 가확정은 올 6월프랑스 니스에서 결정됩니다.

○정희용 위원 올 6월 달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정희용 위원 그러면 이것 개최를 하면 경제효과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나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경제효과를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정상급 그 다음에 각국의 해양 관련된 정책들이 총집합해서 1만여 명 정도가 의견을 내고 우리가 전체 스와프해서 갈 길을 제시하는 그런 회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6월 달에 프랑스 니스에서 유치 표명을 하는 거고 확정은 12월에 되는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유엔에서 확정이……

○정희용 위원 12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12월에 됩니다.

○정희용 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부산엑스포 유치를 실패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정희용 위원 국민들이 기대를 많이 했다가 국제 행사가 실패가 되면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유치를 할 거면 주도면밀하고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정희용 위원 장관님, 지금도 6월 달에 한다 그랬다 12월 달에 하고 이게 헛갈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에서 제3차 UNOC를 하고 있고 최종 결정은 유엔에서 12월에 한다는 말씀입니다.

○정희용 위원 그래서 때가 돼서 급해서 막, 여기 여야 위원님들께서 친선협회 활동도 하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여러 나라들하고 친분을 맺고 있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사전에 좀 이렇게 농해수위 위원님들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한테 우호적인 국가 또 아직까지 의견을 표명하지 않은 국가 또 어려운 국가를 나눠서 같이 노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잘 준비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국에 국민들께서 유엔해양총회를 대한민국에 유치해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차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2차 질의를 시작할 텐데요, 2차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문대림 위원님 2차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장관님, 제주도청에 해수부 공무원을 파견하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제주-칭다오 신규 항로 개설과 관련해서 제주도

가 해수부와 협의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러는지 아니면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인지 행정 지원을 다른 기관을 요구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미 중국 교통운수부도 지난해 11월에 항로 개설에 동의한 상태라고 알려져 있고요 해수부도 재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줄 알겠습니다마는 이게 이렇게 이슈화되는 게 저는 안 좋다고 보여지는데 장관의 솔직한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간략하게 답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지금 영향평가 중이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문대림 위원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게 지금 우한-부산 노선을 승인을 했고 그 뒤에 두세 건이 더 남아 있습니다. 순서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문대림 위원 병합해서 진행할 수 없나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노선이 틀려서 아마 선사들의 이익구조가 좀 틀려서 그럴 겁니다.

○문대림 위원 도에서는 모든 준비 절차를 마무리했고 하역 장비까지 설치한 상태인데 지금 영향평가의 기간 동안 마냥 기다려야 되고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이런 상황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거는 기사를 보면서 참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어선 사고와 관련해서, 사고 수습과 관련해서 어업인들 그리고 해양수산부 공무원들, 해양경찰청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종자 수색과 관련해서 지난 구좌읍 인근 해상 좌초 사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제주 해녀들의 역할이 꽤 컸다 인정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것 듣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니까 물흐름, 물살을 알고 그 지형지물에 익숙한 분들이 투입돼서 상당한 성과를 내보였다 인정하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문대림 위원 어쨌든 마을 주민들도 발 벗고 나서 줬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장관은 어떤 입장을 표명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지금 아시겠지만 해경에서 구조활동 우리 인센티브 수당들을 지급을 할 수 있겠고……

○문대림 위원 그 인센티브 수당 제가 봤는데요, 저는 인센티브 수당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장관의 입장에서 그들이 발휘해 준 공동체 정신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표명했는가, 해녀들이 이랬든 공동체 정신을 발휘해 준 모범적 사례라고 보여지거든요. 해녀의 아들이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리고 해녀가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돼 있고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맞습니다.

○문대림 위원 등재 당시에 조승환 전 해수부장관께서 축하하면서 우리 해녀의 어업 시스템이 계속해서 보전·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씀 주셨었고 또 장관께서는 지난해 우리 고유의 해녀 어업유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보전·계승하고 더욱 발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아시다시피 해녀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고 해녀들의 삶은 녹록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대통령님께서 참석한 민생토론회에서도 장관님께서도 해녀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또 어쩌면 해수부 입장에서는 인류무형문화유산이자 세계중요농업유산인 해녀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래서 그런 공언을 했다고 보는데, 문제는 올해 업무보고에 해녀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

○문대림 위원 그냥 말로만 해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중수본 본부장 맡고 있는데 우선은 심각 단계가 끝나고 어느 정도 사고 정리가 된 이후에……

○문대림 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올해 업무보고에 해녀라는 단어가 없어요, 해녀라는 단어가. 전 해수부장관께서도, 현 강도형 장관께서도, 대통령께서도—대통령 지금 아니지만—해녀, 해녀 강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보고에 해녀에 관한, 해녀라는 단어조차 없 다니까요. 필요할 때만 해녀의 아들이시지요? 깊이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녀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겠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저희 방으로 가져와 주시고요.

그리고 한일어업협정 관련해서 2016년 이후 9년째 타결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18년 이후에 협상조차 진행되고 있지 않고, 때문에 어쨌든 한일어업협정 체결 당시 어업인들은 약 200m 떨어진 일본 EEZ에서 갈치 조업을 해 왔지만 협상 자체가 멈춰 버린 현재 겨울철 갈치 어획을 위해서 목숨을 건 원거리 조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한일어업협상 중단 초기에는 한 480에서 650km 떨어진 해상에서 조업하였으나 최근에는 약 800km 떨어진 대만 인근 동중국해에서 갈치잡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해서 해수부가 어업협상 지연과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2016년도 이후 해수부 어업협상 전략과 실천 내용을 문서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9년도부터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를 명목으로 원거리 출어선 대상으로 출어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원거리 출어선 대상으로 출어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대체어장 자원조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체어장 자원조사의 실질적 내용이 무엇입니까? 출어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자원조사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출어경비 지원조차도 2020년 이후에 대폭 감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수부 입장에서는 줄어든 사유로 대체어장 출어가 줄어들면서 예산이 줄었다고 답변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쩌면 어업협상 결렬이 장기화되는 과정 속에서 벌어진 현상일 수도 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관련해서 해수부가 대체어장을 마련하거나 특별 감척을 실시하는 등 어업인들을 위한 나름대로의 대책,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삼석 위원 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서삼석 위원 후쿠시마 오염수가 지금 어디서 해류하고 있어요? 모르시지요? 언제 우리 해역에 들어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지금 시물레이션 모델에 따르면 3, 4년 정도 남았습니다.

○서삼석 위원 3년이면 3년이고 4년이면 4년이고 정확히 해야지 그렇게 대충 적당히 하면 쓰겠어요?

현장의 어민들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어업이 위기라고 규정하는데 혹시 장관님 동의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서삼석 위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을 못 하는데.

큰 틀에서 어민들이 겪고 있는 인력 문제, 이것을 보면 인구와 지역이 동시에 소멸해가고 있는 것도 실정이고 다 국민들 전체가 동의하고 있는 내용이고. 따라서 어가 생산 가능 인력이 14년에 비해서 23년에는 53% 수준, 약 5만 명이 감소했다는 그런 통계가 이미 나와 있고.

정부가 어업인력 E-9 어선원, E-10 취업비자 제도를 도입했으나 크게 인건비를 절약하는 데 도움이 안 되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일당이 11만 원에서 15만 원을 육박하고 있다.

반면에 어가소득은 23년 2141만 원에서 10년 전인 14년 2100만 원과 거의 동일하게 한 수준이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행히 장관님이 동의하시니까 그나마 개선의 여지가 좀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서 어민들은 그 부족한 인건비를 어업의 소득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이 어민의 현실이다.

또 경영 측면을 보면 여러 요인들도 있겠지만 인건비 말고도 특별히 원자재, 유가 이런 것 가파른 가격 상승에 따른 경영비 증가를 꼽을 수 있고 또 상대적으로 어가의 부채는 14년 2141만 원에서 23년 4302만 원으로 10년 동안에 2배 이상 높아졌다는 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후 문제인데 이것도 다 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알고 있는데 상기시키자면 2015년에서 24년까지 10년간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 피해가 토털 약 3500억 정도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것 여러분들이 다 낸 자료니까.

그리고 눈여겨볼 대목은 고수온 특보 발효일이 21년 43일에서 1년 후, 24년에는 71일로 1년 사이에, 무려 1개월 이상이 늘었다. 이것 심각한 거잖아요, 장관님. 이렇게 어업시장은 황폐화되어 가다시피 변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을 세워야

할 책임 부서인 해수부의 노력들은 현장의 어민들한테 전혀 체감도를 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현실이고 그분들의 지적입니다. 동의하세요, 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거는 더 메꾸도록 하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동의로 받아들여집니다. 제가 지금 좋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본 위원이 지난 국정감사 때 고수온과 자연재해 예방 및 대처를 위해서 해양수산부가 범부처 TF라도 한번 구성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세워 보라 했는데 기껏 한다는 게 해수부 산하기관의 TF를 구성했다는데 뭘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기왕 그거라도 구성했다면 그런 역할들을 충실히 해낼 수 있도록 장관이 관심도 갖고 독려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했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판단,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작년에 저희 의원실에서 어업인 의견조사서를 발간했는데 그 응답자 중의 85%가 현 정부 어업정책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다고 이미 그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상기시키는 거예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삼석 위원** 그러면 시정을 해야지요.

금년도 업무 첫 시작이니까 또 지켜보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알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그래서 노동력 확보 문제 그다음에 어가소득 보전을 위해서 어민들에게 전액 비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관련된 입장 그리고 재해보험과 관련한 보험인정률 확대 등 해수부의 대책을 저희 의원실로 성실하게 작성해서 보고해 주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알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해경청장님, 연안사고는 매년 늘어나고 있지요?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삼석 위원** 작년에 비해서도 무려 10% 정도 늘어나고 있는데 그 관련 법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해경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돼 있지요?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서삼석 위원** 그런데 잘 안 지켜, 오전에 내가 칭찬했는데.

그 25~29년 기본계획이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25년 1월 1일 자로 시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직무를 유기했거나 태만한 것입니다. 고생하고 계시는데 제가 지적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해야해서 좀 서둘러서 이런 연안사고 피해가 더 늘어나지 않고,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 분기 안에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그 사유하고 혹시 감사를 했으면 관련 내용을 보고해 주세요.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힘내세요.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예, 알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아까 질의하던 내용 다 못 해서 다시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장관님,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해양사고, 어선사고의 사망·실종자의 81%가 구명조끼 착용을 안 했다고 나오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러면 구명조끼의 중요성이 심각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박덕흠 위원 그런데 2024년도하고 25년도하고 차이점 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아까 표로 봤습니다.

○박덕흠 위원 봤지요? 이것을 인원 무관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해야지 어떻게 2인 이하 어선 구명조끼 착용으로 더 완화를 해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이것 맞다고 생각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단계별 계획이기도 하지만 이건 조금 더……

○박덕흠 위원 아니, 단계별이 아니잖아요. 이건 2025년도의 계획이고 24년도의 계획에 이렇게 나온 건데 그것은 틀리지요, 단계별하고. 자꾸만 핑계를 대지 마시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고 지금 잘해야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후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이게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구명조끼를 착용하기 편한 것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렇게 하셔서 의무 착용하게끔 해야지, 무조건.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알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족들이 가서 이렇게 해서 돌아가셨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박덕흠 위원 아까 업무보고한 기획실장인가요, 해수부?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이시원 예.

○박덕흠 위원 일어나 보세요.

이걸 거기에서 만드는 거예요, 기획실장님?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이시원 실국과 협의해서 저희가 총괄로 만들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장관을 잘 보필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이시원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이걸 구체적인 적용계획 마련해서 그리고 또 해양 안전사고 대책들 이렇게 현장에 적용한다고 했으니까 저희 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리고 장관님, 김 가격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많으셨는데, PPT 준비한 거니까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마른김은 올라가고 물김은 엄청나게 가격 하락이 됩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습니다.

○박덕흠 위원 이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원인이?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지금 24년 말에 초도 물량이 나오면서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체가 마른김 공장으로 가서 처리가 되지 않은 것을 가장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김값이 막 오를 때 양식장을 더 증설한다 이렇게 대책을 발표한 적 있으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런데 같이 보면 이게 동반이 되는 유통 단계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 감안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할 때 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렇게 되면, 우리 물김 산지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면 결국은 또 양식장을 폐업해야 되고 그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지금 발 빠른 조치를 통해서 물김 가격도 안정세로 가고 있고요. 마른김도 지금 나오고 있는 물김 전체를 마른김 공장에서 지금 가공하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김 수요가 수출이 되고 막 이러니까 양식장을 2700ha 확대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박덕흠 위원 이걸 지금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2700ha는 전체 우리 양식장 면적의 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출 물량과 내수 물량을 밸런스 있게 가려고 그렇게 확대를 했었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런데 물김이 이렇게 많이 양식장에서 늘어나면 쉽게 얘기해서 가공업체가 같이 따라가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가공업체가 따라가 주지를 못한 것 아니겠어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올해 투자계획은 있었는데 저희가 좀 늦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박덕흠 위원 이것 빨리 대책을 해서 빨리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공업체.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김산업협의체랑 같이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것을 빨리 하셔서, 김에 대해서 지금 수출도 되고 여러 가지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이 가공업체가 중간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 한 그런 원인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빠른 대책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더 지원하고 챙기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또 김을 제외하고는 수산물 수출이 전부 다 낙제점 같아요. 그렇지요?

김 빼놓고는 지금 전 품목 수출액이 줄어든 것 알고 계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조금 하향세는 있습니다만 지금 유럽하고 미주에 괜찮은 기록을 갖고 있는 것들 더 챙길 예정입니다.

○박덕흠 위원 그리고 이게 1500만 달러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를 보니까 그런데 맞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건 종류별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런데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수산식품 수출확대 전략을 발표했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박덕흠 위원 거기에도 수출 품목 다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그러는데 대책도 그렇고 노력한다는 말씀도 그렇고 이게 나가는 게 없어요, 장관님. 지금 결국은 장관님이 안 하는 건지 직원들이 안 따라 주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수산물과 이를 활용할 가공상품까지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또 해수부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확실하게 한번 기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믿어 보고 하여간 전반기 보고 후반기 때 다시 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김이 우리나라 수출의 효도 종목이지요, 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우리나라 수출도 늘리고 또 어업인의 소득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해수부에서 적극적으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위원장 어기구 다음은 송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저희 농해수위에서 2월 초에 인천항을 방문하고 해운협회랑 해운조합과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장관님, 보고받으셨어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정확한 안에 있는 내용들은 아직 보고 못 받았습니다.

○송옥주 위원 매우 중요한 간담회였는데요. 이게 국내외 경제여건에 따라서 해운산업과 관련된 부분들의 활성화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이 점을 지적하고 같이 논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가안보와 직결된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서 핵심 에너지, 전략물자와 관련된 국적 선사 수송의 중요성을 꼭 되짚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핵심 에너지가 뭔지 혹시 장관님은 아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우리 핵심 에너지라고 하면 연료화될 수 있는 에너지 말씀이신가요?

○송옥주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LNG, 원유, 철광석, 석탄 이렇게 전략물자로 많이 꼽는데요. 이게 국적 선사의 수송 현황을 보니까 LNG는 38%, 원유는 50%, 철광석은 66.7%,

석탄은 93%입니다. 이 중에 LNG와 원유가 조금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왜 이 점을 꼽나 했더니 핵심 에너지를 해외 선사 수송에 너무 과다 의존할 경우에는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염병이라든지 기후위기로 인해서 유사시에 에너지 안보가 매우 취약되고 또 우리나라 국익에 상당한 피해가 올 수 있는 그런 핵심 에너지의 수송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동의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동의합니다.

○송옥주 위원 이 핵심 에너지 수입은 100% 해상운송에 의존을 합니다. 특별하게 여기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우리나라 말고 미국하고 중국을 좀 봤더니만 미국은 모든 군용 화물과 정부기관 소유 또 정부기관 재정지원 화물과 농산물은 50% 이상을 국적 선사로 하게 돼 있고요, 나머지 수출입은행이나 정부를 통해서 용자 및 보증이 제공된 대외무역 화물 전부 100%를 미국 상선으로 운송하도록 법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들어서도 선박법을 만들어서 이 50%를 100%로 올려야 된다고 해서 미국 선박 관련된 보호정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중국도 중국 기업 화물의 50%를 중국 선박으로 수송한다라는 그런 원칙을 지금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LNG 말씀을 드렸는데 대형 화주의 국적선 수송 비중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한국가스공사가 신규 LNG 도입을 위한 계약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관님은 알고 계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특히 카타르, 오만 쪽에서 그런 이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이 LNG 도입을 할 때 FOB 조건과 DES 조건으로 결정하는 부분들이 관심사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에너지 안보에 대한 취약성 보완도 하고 국내 선원 일자리 감소하는 부분들을 많이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이걸 FOB 조건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해수부에서도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협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것은 중요성에 제가 굉장히 공감하고요. 특히 가스공사에 결정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산업부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 관련 업계에서는 핵심 에너지 운송에 대한 국적 선박 이용률을 70% 이상 유지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고요. 또 수송선사라든지 선박의 해외 매각에 대한 방지를, 매각하는 데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조건을 마련하자라고 하는데 이런 법적 근거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두 가지 더 질의를 드릴 텐데요.

지난해에 화성에 있는 전곡·제부항을 비롯해서 10개항이 국가어항 신규지정 예비대상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이게 예산이 반영돼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야 되는데 한 톨도 반영이 못 됐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해수부에서 하는 사업, 장

기적인 프로젝트인 국가어항 개발사업이 너무 진행이 더딜까 봐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화성에 있는 전곡항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혹시 보고 받은 바가 있으신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이 전곡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사도 했었고 관심이 많습니다.

○송옥주 위원 맞습니다. 마산수로에 대한 퇴적 진행으로 인해서 선박 입출항에 문제도 생기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해수부의 4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등 행정 절차를 이미 이행한 바가 있는데 이 매립계획 고시 후에 5년 이내에 매립면허를 취득하지 않으면 이걸 다시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제가 돼서. 이 기한이 2026년 8월입니다. 그 전에 이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타서 예산이 반영돼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 하는데 올해 추경이 되면 이 부분이 단순하게 국가어항이 아니라 지역경제라든지 안전한 선박 통행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해서 추경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추경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협중앙회장님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어선원보험과 관련해서 약간의 부조리나 불법 행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선원보험을 가입할 때 좀 단순하게 돼 있나 봐요. 별도의 확인 절차가 없이 선주들이 해경에 승선 명단을 제출하면 그냥 어선원보험에 가입하는 식으로 돼 있어서 이게 보니까 조업을 가장해서 불법 원거리 낚시 어선이 횡행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이 어선원보험이 국비가 지금 투입이 되고 있네요, 967억 원. 그렇지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예.

○송옥주 위원 투입되고 있는데 이런 불법 행위가 자행되면서 국비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혈세가 낭비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 어선원보험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고 또 제대로 된 어선원들이 이 보험에 대한 혜택을 받아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일 문제가 낚시 어선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반 어선들은 피해 없이 해서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해양경찰도 여기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장 조업 낚시 행위를 만회하기 위해서, 적발을 좀 더 회피하기 위해서 어선위치발신장치라든지 선박자동식별장치 같은 것을 차단하는 경우가 생겨서 해양치안 서비스를 무력화시키거나 이 부분들을 문제가 생기는, 피해가 생기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없이 할 수 있도록 해경에서도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예, 현재도 단속 중이고 앞으로 수협 등 유관기관들과 협업해서 좀 더 위치발신장치를 끄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호 위원 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서천호 위원 지난 국정감사 때 해상풍력발전 관련해서 문제점을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또 당부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재차 해상풍력발전 사업 추진 절차를 상기를 시켜 드립니다.

우선 사업타당성 검토는 사업자가 지금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서천호 위원 그 이후에 발전사업 허가는 산자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소위 발전 용량에 따라서 3MW 초과는 산자부장관, 3MW 이하는 시·도지사가 발전사업을 허가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 이후에 환경성 검토, 입지·개발 협의는 해수부, 환경부, 문광부, 국방부, 행안부 등에서 협의를 해서 입지·개발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3단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입지·개발 인허가 부분은 역시 해수부가 관여를 합니다. 해수부, 산업부, 물론 최종 실시계획 승인은 산업부에서 합니다만 해수부 협의를 하도록 돼 있고 또 개발행위 허가는 지자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역시 해수부에서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절차는 지금 맞지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서천호 위원 그래서 이 절차가 국제 기준에 아주 어긋나는 절차이기는 한데 사실은 엉터리 절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공시된 절차이기 때문에 이 절차에 따르더라도 해수부의 입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차에 근거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보면 해상풍력 관련해서 해수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지난 국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해상풍력의 문제점이라는 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시는 대로. 2024년 기준으로 보면 21개 허가가 났고 외국계 자본이 56%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의도 면적의 838배, 제주도 전체 면적의 3.8배 정도가 지금 허가나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어업인들 바다에서 몰아내고 외국 자본의 돈벌이 장소로 이렇게 해야 될 그 정도로 시급하고 긴급한 사안이었느냐. 아마 장관님께서 동의를 안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서천호 위원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발전허가가 난 곳이 어업활동보호구역의 90%가 지금 중첩이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어민 생활 터전을, 제주도 3.8배 공간을 외국 자본한테 지금 던져 주는 거라는 말입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우리 바다 영토를 팔아먹는 거예요, 정책을 통해서. 이 점은 제대로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아 있는 절차는 있지만 이 내용만 보더라도 정말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초기부터 재검토해야 될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천호 위원 앞서 얘기했지만 해외, 영국이나 덴마크 등 해상풍력 주도국들과의 사업 추진 절차를 비교를 해 보면 앞뒤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그건 절차를 말씀을 안 드려도 되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러 법안이 산자위에 계류가 됐고 일부는 통과가 됐는데 실제로 우리 어민들도 반대 의견이 많잖아요, 실제로 반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 수협 회장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예.

○서천호 위원 사실이지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예.

○서천호 위원 이것을 왜 이렇게, 우리가 풍력을 안 하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또 지금 비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수적인, 풍력발전소를 설치하고 송전선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따지면 실질적으로 비용 문제는 천문학적인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에너지원입니다. 이렇게 우리 어민들의 생태까지, 생활 터전까지 파괴를 해 가면서, 어찌 보면 제주도 3배 이상 되는 영토를 외국 자본에게 넘긴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저는 정말 이 근본 문제부터 재검토해야 되는데, 물론 허가권이 해수부에 있지 않다는 건 제가 압니다. 지자체도 있고 산업부도 있지만 그 과정에 해수부의 역할이 반드시 중요한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절차에 수협과 해수부에서 우리 바다를 지킨다, 우리 어민들의 생활 터전을 지킨다 하는 차원에서 이 절차에 대응을 해 주시고 그 협의하는 과정 하나하나에 대해서 본 의원실로 반드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천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서천호 위원 그리고 해경청장님.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해경청장입니다.

○서천호 위원 앞서 김상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관련해서 불법·위법·부당한 거래들이 횡행하고 있어요. 저한테도 제보가 되어 있고 또 확인도 된 사안이 있고. 그런데 신고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또 노출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손놓고 있으면 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수사기관의 역할 중에 내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가적 정책으로 인해서 위법·부당한 행위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있다면 내사를 통해서나 수사를 통해서 반드시 조치를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 또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안이 포착이 되면 수사를 적극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 수고하십니다.

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윤준병 위원 제가 전국 어촌휴양체험마을 연합회 회원님들하고 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요. 그분들이 느끼고 있는 애로사항 좀 말씀드릴 테니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체험마을 단위가 1개 마을이면, 그 마을이 성공하면 주변의 5, 6개 마을이 함께 성장한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활동하는데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큐베이팅이 좀 필요한데 그동안에는 사무장 인건비 지원이 인큐베이팅 차원에서 일부 국비 보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2024년 폐지돼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이 부분을 2023년 수준으로 복원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공유재산 사용료와 관련해서 어촌계가 사용하면 이건 면제 또는 감면이 되는데 어촌계에서 어민에게 그 일부를 위탁하면 안 되도록 돼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자체적으로 공유수면 관리법 내용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입법이 필요하면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녀 체험과 관련해서 연안안전 관리법상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요원 배치 때문에 안전요원에 따른 인건비 문제가 또 추가로 비용으로 작용되는 만큼 해녀가 안전요원을 겸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이런 내용을 가미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방안 이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송옥주 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해운조합, 해운협회의 의견 청취할 때 건의된 내용 중에 해기사 인력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해기사 양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고요. 또 노후선박 교체에 따른 재정 수요가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재정 지원, 융자 지원이 수반될 수 있도록…… 항만진흥공사인가요? 거기에 자본금을 늘려 달라 이렇게 요청했으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도 챙기겠지만 해수부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윤준병 위원 어선 사고와 관련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습시다만 안전과 관련된 내용은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열정을 가지고 간절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안전사고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님 지적도 계셨습시다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구명조끼 문제잖아요, 지금 당장에. 그러면 구명조끼 문제는 정부가 그게 문제라고 인식이 됐으면 제대로 이걸 치유를 해 줘야지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2인 이하로 이렇게 후퇴하는 게 아니고 기상특보나 인원과 무관하게 구명조끼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착용하기 위해서 실제 구명조끼를 제대로 공급하고 그 내용이 조업을 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만드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제대로 구명조끼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냥 구명조끼 한다고 해 놓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또 미루고 이번에도 지금 추경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추경이 되면 반영하겠다고. 저는 이런 사안 같으면 예비비라도 써서 바로 조치하겠다고 이렇게 정부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규정도 그렇고 예산적인 뒷받침도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미적지근하게 얘기하

는 것, 저는 이런 자세는 우리가 진짜 사고를 제대로, 미연하겠다는 또는 방어하겠다는 자세로서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이 부분 좀 적극적으로 해서 대처를 해주셔야 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더 빠른 길을 찾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준수하도록 처벌 규정도 강화하는 것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생명을 담보로 하는데 일상적인 편안함 때문에 생명을 잃어서야 되겠어요? 그것은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저는 이 부분 제대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또 어업인들의 자율점검 기준 제대로 보완하시고요.

또 어선의 위치 관리 수협에서 맡고 있지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예.

○윤준병 위원 어선안전조업국에서 맡고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한 점검도 제대로 하셔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위치 관리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또 구조 참여하는 데 조업 중인 어선이 참여하잖아요?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유류비를 지원하는데 실제 유류비가 7880원이라고 그래요. 이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해서 사실상 보상치고는 말이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지적되고 있으니까 어민들이 원하시는 보상 수준까지 만족스럽게는 못 하더라도 최소한도 자발적으로 한 내용에 대한 보상은 그래도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수준은 책정해서 이걸 협의를 해 주셔야지, 또 이런 얘기는 아무도 안 해요.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예, 인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 주십시오, 위원님.

○윤준병 위원 그다음에 지금 사고 내용 중에 노후어선 비율이 많다 이런 지적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박의 내구연한 제대로 챙겨서 노후선박들이 조기에 교체될 수 있도록 또 이 부분도 함께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대책에 녹이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항공기는 관제탑에서 전체적인 내용 하는데 어선들은 어디에서 실제 입출항에 대한 통제를 다 합니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각 수협 항포구에서 다 합니다.

○윤준병 위원 항포구에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예.

○윤준병 위원 이것도 제대로 해 주셔야 되는데 말로만 한다고 하고 사실상 묵인해 주고 용인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불법 입출항이 되고 있는 거지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요새는 그런 것 안 합니다. 철저히 합니다.

○윤준병 위원 그것 없도록 한번 다시 점검해 주시고요.

1분만.....



어선원안전감독관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지금 숫자가 절대 부족합니다.

○윤준병 위원 그러니까 어선 대책으로 만들면서 지금 현재 100명 늘리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9명인데?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윤준병 위원 100명 늘리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정부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까, 지금?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행안부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대본·중수본 입장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러니까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런 정도 안전 대책이 수립돼서 발표되려면 그런 협의가 다 끝나서 ‘100명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게 대책이지요. ‘그것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충분히 납득될 수 있는 방안들 만들어서 진행시키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송옥주 위원님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해서 어민들 피해 있는 것 제대로 점검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관님이 실제 그 어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이것 때문에 꽤 많은 손해를 받고 있다는 것 아시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아시겠지만 현장 갔을 때 조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주위에.

○윤준병 위원 그러니까.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러한 말씀을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피해 정도에 대한 산정이 아직 안 돼서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윤준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고 계신 피해 정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거나 조사를 하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윤준병 위원 조사를 해야 되는데 석유공사가 미온적이잖아요, 지금? 미온적인 것으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올해 용역을 한다고 했으니까요.

○윤준병 위원 그러니까. 한다고 했으면 빨리 끝내서 빨리 하도록 독촉해서 그게 조기에 보상 대책이 나오도록 유인을 해 주셔야 될 책무가 해수부장관에게 있다, 어민들에 대해서는. 그런 점을 지적합니다. 적극적으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조건부 허가한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윤준병 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위원장 어기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위원님.

○윤준병 위원 예.

○위원장 어기구 다음은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선 위원 충북 증평·진천·음성 임호선 위원입니다.

장관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대형 해양사고가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임호선 위원 큰일이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임호선 위원 바다라고 하면 우선 안전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 어민들 입장에서는 돈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돈 되는 잘 사는 바다가 돼야 되는데. 대전제가 안전한 바다일 겁니다.

그런데 1년 중에서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11월·12월·1·2·3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호선 위원 지난 3년간 해상특보 발효 현황을 보니까 12월 달이나 3월 달 이때가 제일 위험하네요? 지금 사실은 어민들 입장에서 가장 위험한 시절을 보내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뜰이나 지금 대형 해양사고가 빈발하고 있어서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 한 건이라도 급하게 줄여야 되는데, 그 대책 중에서 제일 신경 많이 쓰시는 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이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임호선 위원 이게 작년도에는 얼마 예산 투입했지요? 작년도에는 6억 원 정도 투입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작년 24년도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정확한 예산 규모는 제가 지금 찾아봐야겠습니다마는……

○임호선 위원 혹시 뒤에 알고 계시는 국장님 계신가요? 24년도 구명조끼 보급 예산?

○해양수산부어업자원정책관 최현호 어업자원정책관입니다.

특pecially 구명조끼……

○임호선 위원 없었어요? ‘있다, 없다’.

○해양수산부어업자원정책관 최현호 그게 아니고요. 있습니다, 있는데요. 전체는 6억 9700만 원인데요. 그중에서 어업인이 원할 때 거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예, 오케이, 좋습니다.

구매비용의 60%를 지원하고 자부담이 40%, 그러니까 10만 원 정도의 비용이 투입, 들 어갈 경우에 자부담이 40%니까 한 사오만 원 정도 부담해야 되는 부담도 있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임호선 위원 그런데 지금……

어선 안전 대책 이것 한번 띄워 봐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어선 안전관리 대책 보니까 모든 어선 15만 명에게 구명조끼를 보급할 때…… 저게 통계가 잘못됐지요. 147억 원이지요. 147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어디선가 기사를 본 기억이 나는데.

이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추경에 147억 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신다는 말씀 직접 장관님이 하셨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추경이 된다면요.

○임호선 위원 이게 반영…… 정부안에 만약에 추진된다면 정부안에 다 담으실 생각이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임호선 위원 우리 농해수위 위원님들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147억 원 이것은 60%를 가정한 겁니까 아니면 무상 보급을 전제한 겁니까, 15만 명 전 어민?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전체 어선은 무료로……

○임호선 위원 무료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지금 나가는 것으로, 아마 계산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 내용 파악해서 국회하고도 좀 협조해 주시면……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임호선 위원 그러면 금년 내에 이렇게 되면 모든 어선원에게는 구명조끼가 다 일괄적으로 보급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러면 안전이 많이 확보가 되겠네요. 그렇지요? 기대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임호선 위원 그리고 이런 차원에서라도 추경에 좀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해경청장님!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해경청장입니다.

○임호선 위원 청장님, 늦었지만 취임 축하드리고요.

사실 안전한 바다를 위해서 해경이 담당해야 될 역할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임호선 위원 제일 중요하지요. 소방도 따로 없으니까 사실은 소방까지도 같이 담당하셔야 되는 부담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저도 경찰에서 사실은 해경하고 한 지붕에 있을 때 같이 근무를 해서 누구보다도 애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해경 처우를 보니까 앞서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께서 해군 급식비의 절반밖에 안 된다는 말씀 하셨는데.

청장님, 초과근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표에 보시면 현원이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불과 3년 사이에 많이 늘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초과근무수당 얼마 안 늘었어요. 그런데 얼마 안 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니까 함정근무자 초과수당은요 21년도에—여기 표를 기준하면—920억 갖다가 22년도에 971억까지 초과수당이 지급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24년도 보니까 867억, 100억 원 이상이 줄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내용이나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초과근무 예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3교대를 하면 근무일수 중에서 부대 정비나 교육훈련 이

런 것을 실시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그렇습니다.

○임호선 위원 거기 승선 안 돼 있을 때는. 그런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대 정비나 교육훈련을 감축시켜 가지고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축소했다 이런 설명이 나와요. 청장님,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예.

위원님,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균적인 초과근무를 기준으로 수당을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해양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나 특수 수요가 발생하게 되면 직원들의 초과근무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고 그 경우에 수당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2년 동안 저희 위원회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가지고 한 500억 정도 증액을 해서 금년도에는 일단 부족분은 저희가 다 보충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의 안전과 보건까지 감안해서 적절한 수준의 초과근무를 하고 또 초과근무를 하게 됐을 때는 반드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직원들이 근무를 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안전한 바다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해경 동료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100억 이상의 수당이 덜 나간다면 그러면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장관님, 북극항로 말씀 들어 보셨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럼요.

○임호선 위원 2011년부터 해수부에서 준비를 죽 해 오고 계시고, 이게 북극항로 물동량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지구온난화 때문에 북극항로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료를 보니까 해수부에서 2023년도에 국적선사 북극항로 진출 기반 조성을 위한 북극해운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를 한 게 있더라고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임호선 위원 그러면 북극해운정보센터 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항로가 열리면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호선 위원 항로가 열리면이 아니라 지금 북극해운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를 하신 거니까 이것에 대한 나름대로…… 왜냐하면 지금 여기 물동량이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을 갖고 계시거든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화물선은 되는데 컨테이너선이나 안정적인 운항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불가해서 장기적인 비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북극해운정보센터 구축이 필요하다면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장관님,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님이 제가 위원이 됐을 때 처음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북항 개발 관련해서 질의를 하실 때마다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지, 그리고 때가 되면 각종 뇌물이나 부패 혐의로 신문지상을 도배하는 일이 술한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지난 12월 2일 날 박형준 부산시장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북항 1단계 랜드마크 부지에 외국 자본을 포함한 4조 5000억 원을 투입해서 88층 규모의 복합콤플렉스 부산 랜드마크 타워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부산시가 북항 랜드마크 컨소시엄을 구성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이게 투자 유치와 관련된 공식 문서네요 이미 지난 10월 달에 부산시하고 현대자산운용하고 주식회사 어크로스디라고 하는 부동산 개발업체하고 이렇게 컨소시엄 구성해서 업무협약서를 체결한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와 협의를 해서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 이 정도의 내용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봤을 때, 지난 12월 달에 발표한 것 보면 마치 부산시가 투자 유치가 한 4조가량 되는 게 확보가 된 것처럼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것은 저는 사실 왜곡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부산시가 이런 발표를 할 때 해수부하고 협의가 좀 있었나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공식적인 논의 과정은 없었습니다.

○**임미애 위원** 없었어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임미애 위원** 그러면 부산항만공사 사장님, 이것 부산시하고 협의가 있었나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송상근** 브리핑 직전에 자료는 저희 받았습시다라는 사전 협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사전 협의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땅은 부산항만공사가 소유주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송상근**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개발하겠다고 컨소시엄 구성해서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하려면 당연히 항만공사 혹은 해양수산부하고 이게 협의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러면 이후에 이 부지 소유자인 해수부나 부산항만공사가 부산시와 부지 처분과 관련해서 논의를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공식적인 사업 제안이 있을 때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임미애 위원** 그러면 하실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공식적인 그게 온다면, 오퍼가 온다면 당연히 그것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항만공사 사장님, 여기 부지 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계속, 며칠 전에 운명을 달리하신 분의 경우도 분양과 관련해서 이권에 개입하고 뇌물을 받고 이런

과정에서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랜드마크를 세우겠다고 하는 이 부지를 이후에 부산시에 수의계약으로 넘겨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송상근** 아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8월부터 금년 4월까지 여러 가지 랜드마크 부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활성화하고 투자 유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문가하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임미애 위원** 그러면 그 얘기는 부산시는 올해 안으로 수의계약해 가지고 부지 소유권 이전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사실이 아닌 거네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송상근** 그러니까 충분히 어쨌든 협의가 필요한 것 같고요. 사전에……

○**임미애 위원** 협의는 필요한데 아직 그런 협의를 한 적이 없고 해수부도 동의한 적이 없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부산항만공사사장 송상근** 부산시가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제안을 하면 용역 협의 과정에서 그게 대안 중의 하나의, 여러 대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대안 중의 하나로 협의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부산시가 국유지를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넘겨주겠다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저는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해수부하고 부산항만공사가 좀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 주시고 협의를 하실 거면 부산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 주셔야지 일방적으로 지분도 없는 부산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마치 4조가 넘는 예산을 이미 투자 유치를 확보한 것처럼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은 너무…… 이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허위사실 유포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조금 전의 부산항만공사 사장님 말씀은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해외 우수 기업 유치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마치 부산시장은 이 부지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논의 과정을 거쳐서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저는 부산시 주민들한테도 이거는 적절한 부산시의 태도는 아니다, 이것은 항만공사나 해수부에서도 분명한 입장을 취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사업총괄기업으로 발표된 어크로스디라는 회사입니다. 여기 회사가 자본금이 3000만 원밖에 안 돼요. 20년도에 설립된 기관인데 거대한 4조 5000억가량의 사업비를 들이겠다고 하는 부산시의 협력하는 업체로 과연 적절한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런 능력이 있겠는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계에서도 이 업체가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거예요. 이러니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시장이 너무 무리하게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이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시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서 해수부에서 혹은 부산항만공사에서 이의제기하거나 정정할 것을 요구할 계획은 혹시 있으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부산시가 사업자 중의 또 한 기관이고요. 그다음에……

○**임미애 위원** 하나인 거지요, 사업자 중의 하나인데 마치 수의계약으로 이 부지를 내가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그렇게 발표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기사에서는 저희가 부처의 의견을 강력하게 담을 수 있는 것

은 저희는 크게 못 봤습니다마는 우선은 사업성, 타당성 이런 것들, 만약에 공식적인 오폭이 온다면 그것을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됩니다.

○**임미애 위원** 공식적인 오폭이 오면 당연히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지요. 그런데 공식적인 오폭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인 행보를 먼저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지적을 드리는 거고 사실 이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된 데에는 부산항만공사가 이 사업을 전적으로 해 나갈 여력이 안 된다면, 지금 용역을 주셨다고 하니까 빠르게 이 일 추진을 위해서도 분양과 관련돼서 속도를 좀 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더 이상 불행한 일은 없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부산항만공사사장 송상근** 예, 하여튼 간에 저희 항 소유주로서 부산시든 어디든 제안 오는 사항들과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는, 용역하고 있는 것을 같이 감안해서 북항 지역이 정말 발전된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부산시하고 입장 확실하게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회의 시작한 지가 두 시간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 16시 20분에 속개하여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어기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병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진 위원** 동북아의 물류 중심 항만으로 발돋움하는 평택항과 병진하는 이병진입니다.

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이병진 위원** 147억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안전 문제 지금 모든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제기를 하셨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이병진 위원**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중요합니다.

○**이병진 위원** 중요합니다.

저기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제기준을, 대안을 갖고 우리가 좀 강화를 해야 되지 않나……

여기 구명조끼, 갑판 작업자 또 미착용 시 어업허가 정지,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병진 위원** 147억 원 이번 추경 때 어떻게 해서라도 지원해 드리고 좀 강하게 해서 한 분 한 분 생명을, 이제는 우리가 귀중한 생명을 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팽창구명조끼 같은 경우에는 딱 붙어 있으니까 불편함이 덜하잖아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점퍼 안에 입어도 상관없는 겁니다.

○이병진 위원 그러니까요. 의무 착용하도록 반강제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이병진 위원 그렇게 해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해경청장님!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해경청장입니다.

○이병진 위원 우리 지금 관할 구역이 어느 정도 되지요?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국토 면적의 4.5배입니다.

○이병진 위원 한 4.4배?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이병진 위원 43.8만km<sup>2</sup>……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예, 맞습니다.

○이병진 위원 우리 한 10만km<sup>2</sup> 되니까 말이지요.

2월 9일 날 서경호 사고 당시에 해경이 먼저 도착했습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아닙니다. 민간어선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렇지요? 대부분…… 너무나 넓어요, 4.4배 정도 되면. 그렇지요?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예, 맞습니다.

○이병진 위원 우리 해경은 1만 4000명이 된다, 안 된다?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1만 3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이병진 위원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이병진 위원 또 그 커버리지가 인력적으로 현 체계로는 불가능하니까 민간어선들이 항상 먼저 달려가서 한 분이라도 먼저 구해 주시잖아요. 그렇지요?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런데 하루 9만 원 주더라고요요, 계산해 보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예, 8만 80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정확하게 8만 8000원, 2000원 제가 더 올랐습니다마는 이것 개선해야 돼요. 그렇지요?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예.

○이병진 위원 그래서 또 민간 협업의 의미도 있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이런 경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예.

○이병진 위원 이것 누가 하겠어요? 하루 그것 받고 그냥 죽기 아니면 살기로 나가서 먼저 구한다든지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없다?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이병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 다 말씀하시잖아요. 차제에 밀어붙이세요. 해 가지고…… 안전 문제가 저개발국가에서나 이렇게 나오는 문제입니다. 3만 8000불이 된다고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다음에 장관님……



PPT 한번 띄워 주세요.

여기가 평택항 자유무역지역입니다. 굉장히 크지요? 100만㎡입니다, 여기가, 자유무역 지역이. 한 30만 평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수입차업체 9개사가 81만㎡를 차지하고 있어요. 80%가 넘는 면적입니다. 그렇지요, 그 정도 되면?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이병진 위원 2009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에 정부는 말이지요 1만 명을 고용할 수 있고 1조 3000억에 달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던 말이지요. 그런데 현재는 어떠냐? 1000명 정도밖에 고용 창출이 안 됐어요, 자유무역지대가 이렇게 설치된 이후에.

그런데 지금 방금 언급을 드린 것과 같이 수입차 보관·출고하는 데 이 넓은 지역이 거의 다 쓰입니다. 국내 물류업체 같은 경우 5개사가 15.7%의 면적만 점하고 있어요. 업종간의 불균형도 굉장히 심하고. 그다음에 평택항의 수출입에는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이게 안 돼요. 우리가 지금 CY가 부족하다고 난리 치면서도 이런 지역은 수입하는 차 업체 관계자들만 돈 벌고 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상식적으로 딱 든다, 안 든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정리할 수 있는 부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병진 위원 들지요. 이게 저는 말이지요 수입과 수출 물동량을 실제로 창출하는 기업에게 혜택이 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 이런 업체들한테 임대료를 더 올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투자 유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리고 물동량 창출의 실적이 있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면적을 과다하게 점유하고 있는 소위 PDI 업체, 주차빌딩 같은 것을 건립하게 해 가지고 점유공간을 좀 줄이는 거지요. 오케이? 그렇지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확보한 공간에다가 지역과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물류 기능을 담당할 사업체들을 좀 입주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우리 보좌관을 통해서 자료요청을 했지만 도착하지 않고 있어요. 계약 당시의 면적,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이병진 위원 그래서 어떤 단계를 밟아서 이게 확대돼 나갔는가를 체크해 보려고 했는데 내지를 알아야. 뭔가 의구심을 제가 갖는다, 안 갖는다?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관께서 말이지요 철저히 좀 조사해서 우리 의원실에 그 자료도 좀 낼 수 있도록 말이지요. 잘 하자고 하는 거지 누구를 책망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은 현시점에서 고쳐서 보다 바람직하고 항구가, 항만이 국가 경쟁력 가질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 데 의미를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제출해 주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평택·당진항 같은 경우 앞으로 이제 발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것에 대한 대책들을 저희가 내부에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병진 위원 예.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현 위원 오늘 장관님 이하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해경청장님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도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올 2월에만 해도 6건의 해상사고가 발생해서 열한 분 돌아가셨고 열여섯 분이 실종 상태예요. 희생되신 분들 명복 빌고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고요. 또 실종자 수색에도…… 지금 계속하고 계신 거지요?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예, 현재도 세 군데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우리 여수 해역에서 어선 침몰사고 실종자 수색하면서 5t급 해경 단정이 전복되면서 당시에 대원 6명이 바다에 빠지는 아찔한 상황이 있었어요.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주철현 위원 대원들 안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전임 해경청장님이랑 함께 계속해서 저희들이 해경병원 건립이 필요하다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노력을 했었는데 신임 청장님도 해경병원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잠수병을 포함한 특화된 병원이 필요한 데 대해서는 저희가 수년째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 해경 관련, 바다 관련 직무상 발생하는 여러 가지 질병, 특화된 질병 치유에도 필요하고 또 남해안 남중권의 통영, 여수, 고흥으로 이어지는 섬이 많은 이런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형 의료서비스가 필요한데 많이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해경병원이 들어서면 남해안 남중권 바닷가에 들어서야 된다, 우리나라 해안선의 가운데니까. 이런 생각인데 동의하십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예, 적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바다에 임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 바다에 있으면 무슨 서해안에, 인천 옆에다가 또 지으려고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시면 제가 노력을 못 하고.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최고 최적지를 찾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계속해서 남해안 남중권을 지금 저희들이 같이, 여수 지역에 해경교육원이 있었는데 알겠지만 이용객들, 교육생들 절반으로 줄어들고 어찌고 해서 관련 사업으로 지금 함께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공감대 형성해서 같이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예, 저희도 관련 용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예, 저희도 올해 국회에서 쪽지예산으로라도 사타 용역 예산 2.5억 원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안 됐어요. 또 올 추경도 좀 노력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최소한 내년에는 꼭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예, 위원회에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주철현 위원 좀 방향성을 확실히 하고 가셔야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될 일도

안 됩니다.

해수부장관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치망어업과 관련된 지역의 민원인데요. 우선 정치망어업이라는 게 딱 고정 그물을 쳐 놓고 해류에 따라서 움직이는 어류들을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주철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선별해서 잡는 게 아니고 소극적으로 들어오는 걸 잡다 보니까 금어기, 금지체장 이런 것에 대한 선택권이 없어요. 들어오는 고기를, 그물 속에 들어오게 되면 버릴 수밖에 없는데 바다에 버리게 되면 오염이 생기고 또 이게 선별해서 버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망으로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 2년 전에는 보도가 크게 되고 그래서 상당히 사회적인 이슈가 됐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때 몇 가지 해법을 제시했었어요. 이것을 이미 잡혀 버린 것에 대해서는 팔아서 최소한 생산비는 하고 나머지는 사회단체에 기증하거나 아니면 어민들의 복지기금으로 쓰자 이렇게까지 하고 그랬는데 이와 관련된 해법이 지금 추진된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부수 어획물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했습니다.

○주철현 위원 그래서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원래 타깃하고 있는 어류가 아니라 같이 잡힌 어류들에 대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지금 검토했고 이게 아마 하반기에……

○주철현 위원 시행을 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시범사업을 해서 이게 아주 적정한 틀에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를 확보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그러게요. 빨리 좀, 한 2년이 지났는데 금지체장을 어긴 것이라든지 금어기를 어긴 어류에 대해서 하여튼 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고요.

이것들이 또 보게 되면 정치망, 어업자협약이라든지 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범사업 실시 이런 것으로 좀 조정할 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럼요.

○주철현 위원 특히 우리나라 해역이 워낙 크고 원양과 근해, 연해가 다 틀려서 금어기 설정도 좀 틀리게 해야 돼요, 지역별로. 그런데 지금은 그냥 일괄적으로 돼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 이 부분도 좀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알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그리고 이제 정치망어업이 형상은 허가가 비슷한데 사실상 면허어업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해수부가 노력을 해 줘서 감척 대상에 면허어업 중에는 처음 포함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감척 보상금이 문제인데 보통 수입액의 3년분, 허가어업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허가어업과 똑같이 그냥 면허어업인 정치망어업 보상금도, 하여튼 간에 3년분만 주는데……

실제로 수산업법상 어업 피해보상 기준이 됩니까? 우리 해수부 기준에 의하면 면허어업은 평년 수입액의 8년분을 주고 있거든요. 8.33년분을 주고 있는데 감척 사업에 있어서만 3년만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민들이 동의가 많이 안 되더라고요. 8년을 다 못 주더라도 명색이 또 이게 면허어업이고 또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그런 어업이기 때문에 한 5

년이라든지 이렇게 좀 늘려 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면허어업의 어업 피해배상 기준은 8.33년인데 허가어업은 3년이고 이 정치망어업 감척 보상만 3년으로 하는 것은 일관되지 못한 것 같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지금 정치망어업뿐만 아니고 일반 감척 어선에 대한 기준도 재정 당국하고 정말 치열하게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특히 코로나 시기를 지났기 때문에 어민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금 불리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 당국하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될 수 있도록 더 설득하고 더 논의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면허어업, 허가어업과 관련된 어업 피해보상 규정이 법령에 정해져 있는데 이 규정의 정신을 좀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유엔 해양총회는 국내에 지금 개최지가 정해졌습니까, 아니면 일단 국내로 해 놓고 다시 정하실 생각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국내 개최지는 현재 없습니다. 개최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주철현 위원** 정해지게 되면 그때 공모하든지 그렇게 하실 생각이구면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개최지는 정해 놓지 않고 추후에 유엔 쪽에서 한번 보자 그랬을 때 저희가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할 수도 있겠고요. 저희가 제안할 수도 있겠고 아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철현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부산 사하율의 조경태입니다.

부산항만공사 사장님, 새로 부임하셨는데 기대가 참 큼니다.

부산이 제2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 보면 제목이 그렇습니다. 한국 제2의 도시 부산, 소멸 위기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출산율이 매우 낮고 또 젊은이들이 많이 떠나고 있고 또 제2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100대 기업이 하나도 없다는 이런 아주 참혹한 현실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장관님도 계시고 합시다라는 상해라든지 홍콩, 뉴욕, 시드니, 싱가포르, 도쿄 이런 아주 굴지의 경제도시 또는 수도가 다 항만을 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오로지 서울, 수도권에 그냥 집중 현상으로 지역, 지방이 폐쇄화되고 소멸될 위기에 있다, 이것은 대통령 잘못도 있지만 저는 장관이나 또 주무부처도 책임성이 매우 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요코하마의 미나토미라이21 같은 경우에 항만을 재개발하면서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항만 재개발을 통해서 이 도시를 발전시켜서 이 도시를 갖다가 활력을 불어일으켜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러면서 살아 있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 미나토미라이라는 뜻이 뭘니까? 미래의 항구라는 뜻입니다. 그 미래를 준비했는데 그런데 우리 부산항만공사는 그러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눈앞에 있는 알박한 이익에 쫓겨 가지고 북마전이 돼 가지고 비리의 온상이 되고 이런 부끄러운 현실이 지금 제2의 도시 부산을 위기에 빠뜨리지 않았나, 20년간, 북항 재개발을 무려 20년간 하면서 기업 하나 제대로 유치하지 못한 그 무능함을 사장님께서 바로잡아야 된다, 그리고 해양수산부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좀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송상근 위원님 주신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주무관청에 있는 해수부와 충분히 상의해서 당초의 목적 취지대로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해수부도 같이 노력해서 제2의 도시 부산이 소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좀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수협중앙회장님, 업무보고에 보니까 해상풍력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렇지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예.

○조경태 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해상풍력 쪽 업자들이 주로 외국계 기업이지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예.

○조경태 위원 영국 회사가 와서 이걸 지금 장악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부산에도, 다대포에도 해상풍력을 하는데 100억 이상을 지원해 주겠다 그런 약속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 애들이 공짜로 해 주겠습니까? 100억 이상,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보니까 그 일부를 돌려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외국 자본이 와 가지고 우리나라의 바다를, 해양을 잠식하는 것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맞습니다.

○조경태 위원 저는 우리 어업인들이 부자가 되는 어부의 세상, 이게 우리 수협의 어떤 목표이지 않습니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예.

○조경태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바다를 외국계 자본이 와서 잠식해 나가고 또 외국계 자본들이 지나친 이익을 남기도록 하는 것은 이걸 정말 역사적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맞습니다. 사탕발림으로 자꾸 어업인을 현혹시키는데 그것 동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경태 위원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 국민들, 대한민국의 어민들을 위한 그런 어떤 정책이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 하는데 한번 소신 발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동의합니다.

○조경태 위원 제가 법안 발의한 것도 바로 그런 목적이거든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예, 봤습니다.

○조경태 위원 그래서 이해당사자인 어민들과 합의를 꼭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지역주민들과도 합의를 해서 보다 더 엄격하게 이것을 단속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예, 그 법이 발의되면 아마 마음대로 못 할 것 같습

니다.

○조경태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좀 주도해서 이런 것을 개혁해 나가는 게 맞지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예.

○조경태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관님, 연안어업의 해상 경계선이 불투명해 가지고 어민들 간에 갈등이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조경태 위원 가덕이나 부산도 보면 부산 앞바다 쪽에 타 지역에서 와서 어업 활동을 하면서 갈등이 많이 빚어지거든요. 그래서 연안어업의 해상 경계선을 분명하게 해 줌으로써 어민들의 갈등을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정부 차원의 해상 경계 기준을 좀 마련해 달라는 그런 어민들의 주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동의하고요.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안이 전체회의에 지금 계류되어 있습니다. 조속히 제정에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조경태 위원 그리고 이게 법안이 발의되기까지는 해양경찰청장님, 단속을 좀 강화해 주십시오.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관님, 청년어업인 지원 활성화를 좀 많이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조경태 위원 지금 보면 어가 인구가 2010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에 무려 46%가 감소했습니다. 어민이 없는 해양수산부는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조경태 위원 그래서 어가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가의 인구를 늘려 나가기 위해서는 청년어업인들을 많이 육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조경태 위원 그런데 청년어업인들이 보면 청년농업인에 비해서 지원이 많이 저조하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평균 보면 농림부의 보고에 보면 1인당 청년농업인은 한 396만 원이면 청년어업인은 한 249만 원 수준이거든요. 이거 개선해야 되겠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조경태 위원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대폭 반영해서라도 청년어업인을 좀 더 육성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어업인 육성이라든가 수산 분야의 창업 활성화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마련해서 아까 보여 주셨던 테이블에서 우리 어업 분야, 특히 청년어업인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더 넓혀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수협 회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마는 이것은 해수부가 수협하고 잘 협업을 해서 가지고 청년어업인들을 좀 더 많이 육성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은 3월 12일 날 청년어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 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수협 회장님, 거기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예, 알겠습니다. 잘해서 청년어업인들이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조경태 위원 감사합니다. 정부에 적극적인 협력도 좀 요청하시고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청년어업인들이 지금보다 많이, 배로 늘어나는 좋은 소식이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적으로 해수부에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덕 위원 장관님, 작년 우리 바다의 연평균 표층수온이 18.74℃이고 68년 관측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전종덕 위원 23년보다 0.65℃가 더 상승을 했었고요.

인공위성을 통해서 관측한 우리나라의 주변 광역해역의 연평균 수면 온도도 21.11℃였습니다. 최근 25년 중 가장 높았습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 국감에서 기후위기 문제를 제기하면서 고수온 피해 양식어가 피해 대책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더 꼼꼼한 대책을 촉구했었지요. 그런데 이 업무보고 자료 보니 기후위기에 대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면서 양식장 재구조화 등을 제시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적극성이 부족해 보입니다.

수산업 관련해서도 어획량이 80년대 151만t이었는데 2020년대 93만t으로 감소했고 고수온 등 기후변화에 따른 감소 추세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 고수온 특보 발령 일수가 71일이었고 이것은 3년 전보다 세 배였고 그다음에 양식업 피해도 1430억 원이어서 전년도보다 세 배나 컸습니다. 이 정도로 기후위기가 심각한 것이지요. 그에 따르는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겠지요. 그런데 이 기후위기는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러면 저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과 그리고 양식발전 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과 대응을 담은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올 10월에 지금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에다가 이 기후변화 대책들을 꼼꼼히 좀……

○전종덕 위원 기본계획에 포함을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습니다.

○전종덕 위원 정말 실효성 있게 정책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해양경찰청장님.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청장입니다.

○전종덕 위원 ‘조개 노리는 해적단’ 들어 보셨습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예, 언론 보도로 확인했습니다.

○전종덕 위원 작년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 동안 6건이나 있었네요. 진해만에서 고출력 엔진을 장착하고 일반 어선보다 서너 배 빠른 속도로 10여 척을 동원해서 조개류를 불법 채취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해경은 이와 관련해서 대응을 하고 계신가요?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예, 2월 17일부터 특별 단속을 시작해서 다음 달 말까지 많은 경찰관들을 동원해서 특별 검거하고 수사에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지금 바다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우리 어민들의 마음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이 관련한 대책을 잘 세워야겠지요?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예, 적극적인……

○전종덕 위원 그런데 언론 보도를 봤더니요 이렇게 나옵니다. ‘어민들이 이 답답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해경은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다. 해경에다 해적단 피해를 신고하면 어민들에게 현장 증거를 갖고 와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경이 존재 이유가 뭐냐. 혹시 유착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어민들이 오히려 돌아가면서 해적단 소탕 작전 비상경계근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언론 보도에 나온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안 되겠지요?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예. 해상에서는 증거 수집이 어려워서 보통 증거에 대해서 많이 저희가 요청하기는 합니다만 저희 경찰관들이 유착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러겠지요. 유착됐으면…… 그런데 소극적 활동 때문에 답답한 어민들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 듣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어민들의 마음을 더 만져 주고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해적단을 소탕해서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예, 보다 적극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리고 주요 업무 봤더니요, 업무 현황 봤더니요 해양 건설비리나 해양 부패범죄, 마약수사 이런 것들은 수사력도 강화하고 집중 단속하겠다 했는데 민생 범죄에 대해서는 별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해적단처럼 민생 범죄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예.

○전종덕 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예. 해양경찰이 갖고 있는 기본 원칙은 민생에 관련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개입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기업형 범죄나 이런 부분들은 척결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해수부장관님, 중대한 결함을 숨기고 운항했던 퀴비틀호 생각나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알고 있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때 제가 국감에서도 이 부분 제기를 했는데요. 이런 중대한 범죄를 일으키면서 속이고 운항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정부 차원의 대응 그리고 아태지역 항만통제국에서 전체가 함께 이런 문제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을 강화할 것을 제가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전종덕 위원** 생각나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전종덕 위원** 그래서 해수부에서 그 이후 조치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했더니 해수부에서 저희 의원실에 답변을 주신 것은 ‘11월에 한일 당국 회의를 해 가지고 한일 간에 안전관리 강화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태지역 항만통제 협의회에서 안전으로는 올라가지 못했지만 논의는 했다’ 이렇게 저한테 보고를 했어요. 맞지요? 맞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공식적인 문서로 올해 제출할 예정입니다.

○**전종덕 위원**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걸 요청드리려고 했고요.

공식 문서로 제출하고 공식 의제화해서 이렇게 중대 결함이 있는 선박들이 우리 항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게 사실은 전체 항해에서 이런 게 근절돼야 되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특히 외국 선박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항만 통제에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고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전종덕 위원** 다만 제가 여기서 아쉬운 것은, 그러면 저희가 지금 퀴비틀호는 운항을 중지했지만 또 부산과 후쿠오카 간에 여객선이 앞으로 또 재개될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전종덕 위원** 그러면 그때도 문제가 되었던 게 뭐였나면 들어오는 배를 2명이 육안으로만 검수를 하니까 이걸 어떻게 밝히겠어요? 속이고 작성하고 온 사람을 밝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관련한 답변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속이고 작성하고 올 경우어나 그리고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기 위한 해수부 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전종덕 위원** 예를 들자면 인력을 더 늘린다든지 아니면 주요하게 경력자를 한다든지 안전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등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저희에게 보고된 바가 없어서, 이런 불법들이 또 안전을 위협하는 이런 운항들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수부 차원의 실질적인 실효성 있는 대책이것이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혹시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항만국통제에 관련된 인력을 현재 2명에서 4명 정도로, 숙련자 위주로 지금 증원은 했습니다마는……

○전종덕 위원 증원했어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이게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단계적인 증원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인력 충원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관심 두면서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러면 더 어디까지 목표를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인력 충원과 관련해서는? 2명을 더 늘렸는데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이 진행돼 있는 거예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현장 소요하고 있는 필요 사항들이 올라오면 저희가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거나 중장기계획을 잡아서 인력 충원에 대한 소요들을 정량화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종덕 위원 인력 말고도 대책 있으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럼요.

○전종덕 위원 이런 문제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금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 문금주입니다.

장관님, 오늘 여러 분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나라 수산물의 최고 효자 품목이 뭐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현재 김입니다.

○문금주 위원 김이지요. 맞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세계적 관심을 받으면서 수출 물량도 증가하고 수출 단가도 크게 상승한 걸로 나오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김의 재료인 물김의 불완전한 가격 또 폐기 이슈가 나왔었는데, 보니까 물김 생산은 매년 비슷한 수준인데 폐기량 변동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25년산 물김이 5690t이 폐기가 됐고 1월 중 물김 가격도 1000원이 넘는 날이 5일에 불과한 걸로 나오습니다. 23년, 24년 물김 가격을 보면 1000원이 안 되는 날은 각각 하루 아니면 거의 없었는데, 아마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원인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다 아실 것이고 여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렇게 재료 가격인 물김은 하락을 하는데 상품 가격은 변동이 없거나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단 말이지요. 어떻게 보면 원물 생산자는 대량 폐기로 시름하고 소비자는 높은 가격에 모두 시름하고 있는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정부가 어떻게 보면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김 생산부터 유통 전 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기가 됐다. 특히 물김에 대한 저장 기술도 개발을 해야 될 것 같고.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공감하고 있습니다.

○문금주 위원 그래서 최근 존경하는 박지원 의원님께서 김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잖아요. 김산업진흥원에 대한 설립 필요성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것도 앞서서 말씀드렸습시다라는 재정 당국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많이 설득을 하고 있고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금주 위원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님이 발의한 김산업진흥원 보면 주로 R&D 관련한 내용들이어서 저는 여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생산, 유통, 마케팅까지 전부 다, 수출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가 가칭 정한 건 한국김유통공사랄지 K-김유통공사 이런 공사 단위의 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됐다,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좀 공감하신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공사 설립에 대한 부분은 아마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금주 위원 저는 김산업진흥원이든 공사든 특정 기관을 지정하는 건 아니고 어찌 됐든 김산업에 대한, 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부터 해서 생산, 유통까지 전체적으로 정부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알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이렇게 해서 고도화, 전문화를 해 가지고 전 세계 시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활력소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문금주 위원 그리고 올 겨울에 역대급 폭설과 한파가 이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 지역은 철저한 대비로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합니다. 관련 언론 보도도 나왔는데요. 이렇게 보면 기후위기도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그거를 직접 지자체나 양식어가에서 보여 줬다고 봅니다.

장관님도 아시겠지만 올해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70%라고 기상청이 발표를 했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문금주 위원 그렇게 보면 고수온 피해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벌써 좀 대비를 해야 될 때다, 지금부터라도 대비를 해야 될 때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동의하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동의합니다.

○문금주 위원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상수온 대책 필요성 지적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도 수산분야 기후변화 대응 TF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작년 12월에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발표하셨더라고요. 여기에 지적사항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일단 감사를 드리는데 이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 실천방안을 조속

히 마련해서 계획에만 그치지 말고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그런데 거기에 제가 지적한 국정감사 내용 중 한 두 가지 정도가 좀 빠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고수온 피해 복구비 지원을 치어, 성어에서 치어, 중간어, 성어로 세분화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게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재해보험 고수온 특약을 주계약에 좀 산입할 필요가 있다. 당시에 도 장관님께서 협의를 해 보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 부분도 지금 빠져 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보완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예.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지금 중간어로 하는 부분은, 중간어 가격으로 하는 거는 행안부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성사 단계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약은 이게 주계약으로 갈 경우에 자부담률이 너무 높아져서 저희가 좀 조심하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금주 위원 예, 관련해서 확정이 되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알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그리고 해양경찰청장님, 취임 축하드리고요. 한 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혹시 전임 청장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았는지 싶어서.

고흥 해경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예, 인수인계받았습니다.

○문금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상욱 위원 울산 남구갑 김상욱 위원입니다.

해양경찰청장님께 아까 질의하던 거 마저 이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아까 1차 질의할 때 해상풍력 관련된 여러 가지 비리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아직 덜 되셨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마 그사이에 일부 파악은 하셨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파악은 해 보셨지요?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예, 일선에서 보고를 조금 받았습니다.

○김상욱 위원 아마 돈이 많이 풀리다 보면 당연히 거기서 많은 비리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비리는 단순 비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민 간의 갈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경의 역량을…… 물론 바다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련해서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서 해경이 역할을 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해경의 수사 분야 중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데드 오일(dead

oil) 찾아내는 거나 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민 간의 이런 분쟁들이나.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해경의 수사 역량, 수사 파트가 신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많은 어려움은 있지만 일선의 많은 수사관들이 최선을 다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욱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이 해경 수사관들께서 좀 더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전문적 역량 강화 그리고 또 청렴하고 공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된 것을 내부 제보하는 내부 제보자에 대한 보호, 이런 부분들에 청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사의 일선 현장에서는 해경 수사하시는 분들께서, 수사과 직원들께서 자존심에 상처를 받을 만한 말들도 좀 일부 있지요. 그렇지요? 저는 여러 번 들은 적이 있는데 청장님께서 해경 안의 수사 파트를 단순히 업무 보조하는 그렇게 보실 것이 아니라 정말 전문적인 수사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공정한 수사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그런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 바다와 관련해서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될 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상풍력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로요. 그리고 그런 사업들을 진행할 때 일차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이 주민 수용성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민 수용성이라는 것이 제가 1차 질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념 자체도 모호하고 또 오염되거나 왜곡될 가능성도 상당히 큼니다. 관련된 사업을 빨리 진행해야 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이권까지 들어가 버리면 더 복잡해지는 양상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좀 폐쇄적인 수사 환경 또는 폐쇄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 관리하다 보면 자칫 잘못을 묻어 버릴 수도 있고 부정한 것에 다 같이 눈감거나 협조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상풍력 사업들도 많이 진행될 것이고 바다, 거의 전국의 바다에서 다 사업들이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양경찰에서도 엄정하게 전문 수사 역량을 미리미리 좀 기르고 또 수사관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공정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지금 경우에 따라 그런 오해도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바다 일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 폐쇄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좀 알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 제가 잠깐 말씀 올렸지만 데드 오일 같은 경우도 찜짜미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제법 얘기를 들은 적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해경에 있다 나온 분들을 데드 오일 회사에서 사람을 채용하거나 해서 방어하려고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사소한 것들이지만 쌓이면 공신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좀 각별히 관심 가져 주셨으면, 그래서 우리 해양경찰이 바다 일에만큼은 공정하게 또 전문적 수사 역량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님께 간단하게 좀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한국해운협회 쪽에서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지금 국제해사기구(IMO)에서 탄소 저감 목표를 설정하고 지금 여러 가지 규제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이 내용 좀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김상욱 위원 그런데 지금 국제해사기구(IMO) 기준을 우리가 충족시킬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김상욱 위원 그런데 충족시키려고 보니 지금 2025년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국적 선박의 절반 이상이 환경에 문제가 있는 D등급 또는 E등급으로 분류가 된다고 되어 있던데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김상욱 위원 이걸 바로잡으려면 또 대응을 하려면 시간도 촉박한데 돈도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요. 예산 어느 정도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산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어느 정도로 돈이 준비되어야 될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게 편차는 있습니다마는 6000억부터 시작해서 1조 5000억 수준까지 좀 광범위한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단히 투입이 돼야 되는 비용들이 존재합니다.

○김상욱 위원 일부 추계에 의하면 2050년까지 투자 비용이 1000억 달러, 145조 원 정도가 들 수 있다라는 추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 자본을 사실 나라에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운 회사, 선사들에서 알아서 해라 하기에 는 너무나 좀 어려운 문제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고 다 수출입으로 경제가 운영되기 때문에 해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안보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보를 위해서라도 체계적 대응을 미리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관련해서 한국해양진흥공사 자본금 확충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논의 내용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자본금 확충에 대한 건 논의 알고 있습니다.

○김상욱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논의가 진행 중이고 장관님께서서는 어떻게 지원할 예정인지 말씀 들으면서 질문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구체적인 부분은 따로 제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고 나서 확대하는 방안 정도만 제가 인지를 하고 있고요……

○김상욱 위원 그러시면 관련해서 한국해양진흥공사 자본금 확충에 대한 문제점과 계획 같은 것들이 있으시면 정리해서 의원실로 주시면 저희도 같이 협력할 부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알겠습니다.

○김상욱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장관님, 국적 선박 감소, 고령화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해운 협회 또 해운조합하고 간담회 현장에서 구구절절함을 좀 저희들이 느꼈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아시다시피 PT에 보면 2000년하고 2022년 비교해 보면 사실 5만 8000명에서 3만 1000

명으로 국적 선원이 줄었잖아요. 또 외국인 선원은 7600에서 2만 8000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앞으로 10년 뒤에 외항선 절반 이상이 사실 운항 차질이 우려된답니다. 1541척에서 한 900척 가까이가 운항 차질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또 노령화도 너무나 분명한 거지요. 여기에 대한 인력 대책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리고 또 아까 송옥주 위원님을 비롯해서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핵심 에너지 국적 선박 이용률이 우리나라가 한 45%뿐이 안 되잖아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은 사실 국적선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특히 LNG나 원유는 50% 미만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고……

왜 그러냐면 이 핵심에너지를 운반하는 국적선의 인력이 전시상황이 됐을 때 외국인이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 선박의 국적 선원이 이왕이면 국내인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적선을 운영하는 핵심 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거냐 이게 숙제인 것 같아요.

여기 봐 주시면 알겠지만 외국 선박, 국적 선박 해서 외국 선박이 55%고 또 국적 선박은 45%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적 선박이 운항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있는데, 좀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목포해양대, 부산해양대 그다음에 고등학교 이런 체계로 지금 인력을 양성하는 데 근본적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해기사를 양성하는 구조를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폴리텍대학을 별도로 설립해서 낮은 단계부터 가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은 섬이라 그러잖아요. 배를 통해서 많은 물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상당한 전략적 차질이 보일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력 양성에 대한 근본적 구조 개편을 좀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지금 해양대학교, 고등학교 이 체계로 안 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다음에 오션폴리텍이라고 해 가지고 조금 운영하는 그걸로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근본적인 구조 전환을 10년 안에 어떻게 이루어 내는가가 중요한 숙제일 것 같다, 저는 좀 그 주문을 하고 싶고.

또 지금 내항선원이 외항선원과 관련해서 좀 차별받고 있는 것들. 외항은 해 주는데 내항은 근로소득 월 500만 원 공제를 안 해 준다던가 그런 복지 제도도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많은 젊은이들이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좀 많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해진공에서 금융 지원도 1.1%예요. 외항은 98.9%고 내항선사는 1.1%예요. 이런 부분도 좀 잘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해기사를 양성하는 구조를 현행 체제로는 제가 볼 때 한계에 봉착돼 있다. 구조 개편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우선은 외항선원의 경우에 23년 7월에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성과가 나오고 있고요. 이거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는 선원노조, 대학 그다음에 일자리 만들어 나가는 과정, 정부, 직접적으로 연계된 분들, 해운조합 같이 포함해 가지고요. 그리고 내항선원에 대한 또 일자리 대책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짙짙 대책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구조 전환을 해 줘야 향후 30년, 50년을 놓고 어떻게 대응할 거냐가 나오지 일부 이렇게 프로그

램을 통해서 양성하는 구조는 저는 아니다 이렇게……

장관님, 한번 좀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계속 이 부분은 좀 갖고 가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이원택 위원 중앙회장님, 물김과 관련해서 아까 정부와 관련된 역할은 좀 많이 나왔는데 수협중앙회에서 좀 할 수 있는 역할이나 대책이 없습니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우리가 지금 검토를 해 봤는데 물김을 보관할 수 있는 임시적인 방법 하나 그다음에 가공 공장을 지역마다 한두 군데 설치해 보려 하니, 가공 공장의 장단점은 있습니다, 김이 한 5개월밖에 안 나니까. 나머지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기타의 일들 때문에 지금 김산업업자들하고 16개 수협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한번 고민을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예, 수협중앙회가 이런 점에서 적극 역할을 해수부랑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보관하는 기술을 R&D를 하거나 보관 장소 그다음에 가공·제조업을 어떻게 키울 건지 등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부산항만공사 사장님, 축하드리고요. 워낙 잘하시니까 잘하실 걸로 기대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부산항만공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거기의 법적 절차, 행정적 절차 또 무리한 사업들, 과도한 사업들 이런 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유동성 비율이 제일 낮지요, 부산항만공사가요?

○부산항만공사사장 송상근 예, 지금 한 96% 정도 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원택 위원 가셨으니까 좀 무리한 사업들 속도 조절을 하시고 또 의혹이 있는 부분들도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산항만공사사장 송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인천항만공사 사장님도 사실 지난 21년, 23년 2개년간 경상손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어떤 비전을 실행하다 보면 투자도 하긴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관리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천항만공사사장 이경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님, 여수엑스포 외부 이 부분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박성현 현재로는 정부 세입으로 되어 있는 세입을 삭감해서 연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활성화 대책도 세우고 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저희가 해야 하는 역할인가요?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박성현 예.

○이원택 위원 정부 차원은 없고 국회에서 세입을 삭감해라?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박성현 예.

○이원택 위원 해수부장관님 동의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저희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기재부하고 난상토론 수준까지 얘기를 했었는데요.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원택 위원 그 말은 우리보고 삭감하라는 걸로 저희가 해석해도 되겠네요. 저희 그



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장관님, 해상풍력법 관련해서 아까 우려가 많이 나왔는데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어제인가 오늘 통과됐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이원택 위원 거기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21대 때 제기됐던 내용들을 저희가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정부 주도로 해야 되는 이유, 그다음에 입지를 주도적으로 해수부가 해야 되는 것……

○이원택 위원 계획입지 하는 것.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다음에 어업인과 주민 수용성, 그다음에 베니핏 세어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넣고 어업인들과 같이 소통해 나가면서 이번에 아마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중앙회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우리 안이 거의 100% 반영됐기 때문에 아마 해상풍력발전 사업하는 사업권자들이 좀 고민해야 될 겁니다.

○이원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정희용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용 위원 경북 고령·성주·칠곡의 정희용 위원입니다.

장관님, 제가 늘 회의 때마다 북한 서해 GPS 교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 말씀 드리면 장관님께서 답변이 지상파항법시스템 보급을 늘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정희용 위원 그 지상파항법시스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지금 확대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사실 예산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확대해 가지고 더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몇 퍼센트 정도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퍼센트까지 말씀드릴 정도는 아니고요. 관공선 수준이고 그다음에 일반 어업 선박들이 필요한데 그게 아직 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희용 위원 북한이 GPS 교란 도발은 계속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정희용 위원 지금 사고는 없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아직 사고는 없습니다.

○정희용 위원 사고가 없어서 다행이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정희용 위원 국내 여객선이나 또 어선들의 월북 문제도 있고 또 사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고 준비 대응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오늘 아무도 질문 안 하시던데, 지금 과학적으로 유의미한……

○서삼석 위원 내가 했어.

○정희용 위원 하셨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지금 유의미한 어떤 조사의 결과는 없습니다. 없고요.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일상 업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희용 위원 어떻든 간에 한동안은 막 진짜 끓는 물처럼 그걸로, 사실 농해수위에 해수부장관님 오면 회의가 그것만 이야기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경각심을 늦추지 말고 국민 안전에는, 정부가 책임지고 국민 안전을 지킨다 이런 생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저희가 정점들을 정해 놓고 필요한 곳에서 샘플링해서 분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희용 위원 정치적인 그런 게 아니고 과학적으로 국민 안전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정희용 위원 대왕고래 프로젝트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해수부에서는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러면 석유공사가 받아 가지고 어민들 그리고 포항시, 수협 이렇게 4자가 피해 여부를 협상하는 거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정희용 위원 그런데 석유공사는 아직까지 어민들한테 피해가 난 게 입증이 안 되니까 피해 보상을 안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해수부에는 공식적으로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어업 피해 보고 건은 지금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정희용 위원 포항시도 접수된 것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려를 하는 것처럼 피해가 있다거나 한데 접수를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피해가 없다고만 자꾸 석유공사에서 하면 또 안 되는 거니까 포항시에 안내를 좀 하시든지 아니면 해수부 차원에서라도 아니면 수협에서 대응을 해 주시든지 피해가 있다면 언제든지 이렇게 상세히 알려 달라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놓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래서 초기부터 저희가 조건부 승인할 때 포항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석유공사, 그다음에 어민들 관계를 돈독히 하고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지방청에서 역할을 좀 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래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성공을 한다면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정희용 위원 그렇지만 또 어민의 피해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선 사고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선 사고가 계속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런데 2021년, 2022년에는 조금 줄다가 작년에 다시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정희용 위원 그게 전문가들은 풍랑특보가 증가했다, 무리한 조업을 하고 있다 또 먼 바다로 나가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어선을 개조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비할 게 너무나 많은 거지요, 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런데 풍랑특보야 풍랑특보 때문에 조업 일수가 줄어드니까, 그리고 생산비는 올라가고 그러니까 더 무리하게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사고는 늘어나고 이런 거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상황이 그렇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걸 기후가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기후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로드맵을 그리면서 조업과 관련된 문제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고 예방 차원까지 연결해 가지고.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어선 개조는 해경청에서, 해경 측에서 저절 하는 거지요? 적발을 하시는 거지요?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예, 저희가 현장에서 발견하게 되면 관계기관과 함께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개조를 했는데 이게 불법이니까…… 지적, 적발하고 잡는 게 사실은 또 만사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 개량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해수부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어선을 불법적으로 개조하는 게 아니라 개선할 때 할 수 있는 그런 옵션도 어민한테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 복원력이나 선체 설계에 대한 부분들을 법적으로 잘 다듬어서 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리고 선박 복원성 문제도 지적을 많이 하시던데 어선에 대해서는 교육 프로그램이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운영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러면 또 이게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릴 거지 않습니까, 교육과정을.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정희용 위원 그동안에는 수협에라도 위탁을 해서 이 제도 만들어질 때까지, 수협중앙회장님께서 경험도 많으시고 전문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선박 복원성 관련해서 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래서 소중한 어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누구보다 앞장을 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리고 김 양식 관련해서도 질문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정희용 위원 그런데 해조류 불법 양식 적발 건수가 316건이라고 합니다, 지난 5년간. 이게 생산량이 많으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불법 양식 플러스 수급 조절 여기까지 다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김 양식, 특히 김산업협의체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현장에서 생산하시고 가공하시고 유통하시고…… 지자체, 정부, 관련자들이 전부 다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 그다음에 문제점들 잘 밝혀서 이게 크게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희용 위원 해수부에서 장관님 책임감 있게 하셔야 돼요. 이게 김산업 키운다고 막 양식장 늘려 가지고 이런 사태가 초래됐다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지자체에서는 사실은 작년에 지금보다 10배 이상 더 증가시켜야 된다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것도 있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저희가 달라고 달래서 지금 이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민들의 소득, 그다음 물가 안정, 이 두 가지 보고 가고 있으니까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희용 위원 여야 위원님들 모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차 질의를 모두 마무리했는데요.

저도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송옥주 위원님, 윤준병 위원님 또 이원택 간사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농해수위 차원에서 2월 6일 날 인천항을 방문해서 해운협회, 해운조합 이 두 기관과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당시에 이경규 사장님도 같이 함께 고생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위원님들 말씀한 것 플러스 저도 강조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 빠진 것 포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해수부와 관련된 현장의 목소리거든요. 해운조합에서는 우수선화주제도를 외항뿐만 아니라 내항업계에도 확대해 달라, 그러면 좋겠다. 또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을 요청했고요. 또 해기사 양성 등 안정적인 국적 선원 확보 문제 간곡히 요청했고요. 얼마 전에 국회 토론회도 있었습니다. 또 선박 결함 신고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의 요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해운협회에서는요 해진공 자본금 현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확충해서 친환경 선박

금융 확대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 또 오늘 송옥주 위원님 지적도 있었습시다만 핵심 에너지의 국적선사 이용률을 70% 이상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 또 선원 인력, 내항과 마찬가지로 외항도 선원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안정적 확보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달라 이런 부탁이 있었고요. 또 국적 컨테이너 선대 현재 100만TEU에서 200만TEU로 확대할 수 있도록 좀 도와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것은 아마 기재부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톤세제도 영구화 문제, 이게 전 선진국들은 다 톤세제도를 영구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일본만 5년 일몰제도로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영구화를 해야 해운업계가 발전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 또 아까 이원택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선원 비과세 소득 등 이런 세제와 관련된 요청도 있었습시다.

그래서 저희 여야 위원님들이 함께 우리 해운, 오늘 장관님께서도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해상 물류 공급망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인사말씀에 말씀이 있었고 또 교통 물류 복지 확대로 어촌과 섬 지역 주민들 생활 여건을 개선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다 거기에 관련된 숙제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야 위원님들이 함께 열심히 우리 해운 물류 발전을 위해서 땀 테니까 해수부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지금 해운조합하고 해운협회와도…… 위원님들 다 오셨지만 사실은 얘기를 다 못 한 것들도 아마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소통 더 강화해서 어떤 게 문제인지도 더 파악을 해 놓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부탁드립니다.

또 해운보안·항만보안 노동자 처우 개선 문제 관련해서 해수부가 용역을 했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습시다.

○**위원장 어기구** 그 용역 결과의 핵심이 4조 2교대 전환하고 특경을 청경으로 신분 전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4대 항만 통합기관을 설립하자는 것이 아마 용역의 핵심 결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잘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장관님. 제가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 왜 이렇게 잘 안 된다고 보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게 현장점검을 한 번 더 저희가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임금의 차이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근무환경에 대한 편차도 아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각 직장별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좀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고요.

여기에서 이것을 한 번에 다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항만공사마다 다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데, 4조 2교대 정도는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울산하고 인천항만공사는 4조 2교대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인천 사장님, 맞지요?

○**인천항만공사사장 이경규** 예, 저희들은 작년 7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그러니까요.

울산도 하고 있고, 그렇지요, 울산 사장님?

○울산항만공사사장 변재영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그런데 지금 부산, 여수광양만 협의 중이에요.

부산항만공사 사장님, 어떻게 이 부분 잘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부산항만공사사장 송상근 예, 지금 삼자 간에, 당사자 간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취지대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내버려두면 안 되고요.

여수광양 사장님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박성현 예.

지금 현재 노조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라는 문제는 근무자 중에도 4조 2교대를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4조 2교대를 하게 되면 기존에 받던 임금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조화를 시킬지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사장님, 모든 정책은 찬반이 있는데요. 다수가 원하면 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2차 질의를 다 마쳤는데요. 이제 3차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 질의는 3분입니다, 3분.

3차 질의 스타트로 문대림 위원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해경청장님.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해경청장입니다.

○문대림 위원 많은 분들이 해난 사고 관련 말씀을 주셨습니다.

25년 들어서 사망 14명, 실종 17명 그리고 2월 9일부터 13일까지는 3건 연속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관련해서 실제 사고에 영향을 주는 게 파도도 있지만 바람의 영향을 고려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예비특보 단계에 특별히 많이 발생했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최근 사례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래서 주의보가 발령된 이후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예비특보 단계에 대해서 사고 발생률의 빈도가 높다면 이것은 기상청과 해경과의 업무 협조 관계에 약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기상청이 갖고 있는 관측장비에서 관측되는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지금 공유되고 있습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지금 서해지방청을 중심으로 해서……

○문대림 위원 아니,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습니까? 시간이 없어서요.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기상청의 정보는 저희가 실시간 받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2시간 이후에 받아 보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예, 일부 그런 곳이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이것을 빨리 해서, 사실 예비특보 단계에 대피가 이루어지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은 예비특보라는 게, 어쨌든 예비특보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미 기상은 나빠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예비특보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대피

가 이루어졌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청과 실시간, 그러니까 협의를 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하시고 이것을 사전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안전성 강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한 것이고, 기본이고 기상예보와 관련해서 특보 단계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러한 경향이 없도록 앞으로는 사전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고요.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위원님, 그것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잠깐만요, 이것 한 다음에……

그리고 아까 문금주 위원님께서도 지역구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제주 지역 해경의 두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

제주 동부해양경찰서, 어업자원 보호라든가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 청장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지역은 언제든지 외교적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고 일일 선박 통행량이 하루 평균 430척에 이릅니다. 그래서 연평균 해양사고도 70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최근 강릉이 신설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예, 신설 중에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강릉은 이 지역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경청의 직급에 관련된 문제도 동시에 풀릴 수 있는 문제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시지요.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상특보 이전에 조기 피항 문제 관련해서는 현재 해수부 또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어선 안전관리 측면에서 저희도 의견을 제출하고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 동부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위험한 해역이어서 작년도에 저희가 대형 함정을 최초로 배치했고 조속히 해경서가 신설될 수 있도록……

○문대림 위원 함정 배치도 좋은데 용역한다고, 용역 진행한다고 했거든요. 회의록에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그것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예.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호 위원 장관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어종 변화가 지금 아주…… 어종 이동이지요, 정확히 하면.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남해안에 나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속초로 이동했다고 아까 이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남해안에…… 소위 성수기가 겨울철이잖아요. 대구 성수기가 겨울철인데 하루에 선단에서—극

단적인 표현을 하자면—대구 두 마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대구 이동이 본격화됐고 기정사실화가 돼 있다. 심지어 새조개라든지 물메기…… 물메기 식당이 문을 닫았어요. 그 정도로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어종 이동 이 부분을 기정사실화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기정사실화해서 수산업·어업 정책의 변화를 모색해야 되겠다는 부분이고 또 대책도 발표하셨고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민들이나 수산업 현장에서 이것을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빠른 시간에 메워야만 이 대응하는 부분이 연착륙이 가능할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책적으로 세밀하게 대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경청장님.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청장입니다.

○**서천호 위원** 장비 도입 계획 수립하는 것은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지요?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서천호 위원** 경찰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해양 분야 전문가는 1명밖에 없어요, 현재 경찰관. 그렇지요?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그렇습니다.

○**서천호 위원** 보니까 학계에도 두 분 계시는데 수학·국사 전공이시고 사회복지 전공이시고 또 법률, 검사 출신이 세 분이고…… 전문성이 있습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해양경찰위원회는 해양경찰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민주적 통제에 가장 초점을 두고 일하고 있습니다.

○**서천호 위원** 그래서 뒤에 보면 특히 장비 같은 경우에는 조항이 있어요. 외부 자문을 얻도록 돼 있는데 그것도 임의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독립성·공정성·전문성이 확보되는 인적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 장관님도 같이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알겠습니다.

○**서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준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님, 이쪽으로 좀 나와 주실래요? 안 보여서……

먼저 장관님, 바지락에 대해서는 보험상품이 없다는 민원들이 좀 있습니다. 보험상품 설계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지금 어종들 살펴야 될 게 많아 가지고 같이 보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예.

사장님, 제가 나오시라 한 취지 아시지요?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박성현** 예, 알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러니까 지난해 국정감사 하면서 공항공사·항만공사 내에 보안시설이 있고 보안시설이 1급 보안시설이라서 엄격하게 관리돼야 될 필요가 있다, 이 지적을 했



는데 그 내용과 관련해서 부적절하게 경위서를 받고 이런 과정들이 있으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좀 적절치 않은 행동이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계시지요?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박성현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청경들, 관련된 분들 불필요하게 오해를 받거나 또는 해서는 안 될 내용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박성현 지난번 국정감사 때 몇 가지 지적사항 중에 관행적으로 23년도에도 보안시설에 들어간 사례가 있다 이것을 저희들이 듣고 확인서를, 누가 들어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보안요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확인서로 확인하려고 했었는데 그 이름을 저희들이 경위서라는 이름으로 확인서를 받다 보니까 일부 관련 없는 보안요원들은 심적으로 약간의 압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경 전원한테 사과문을 보냈습니다. 경위서라는 이름으로 확인서를 받게 된 것에 대해서 유감이고 사과를 한다는 것을 표명을 했고 3월에 또 청경들 전원하고 간담회를 해서, CEO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해결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아무튼 그런 국정감사 과정에서 일어난 내용과 관련해서 불필요하게 청경들이 외압을 받는 이런 행태가 나오지 않도록 제대로 하시고요.

또 보안시설과 관련된 내용 중에 실제 회의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보안, 통제구역에서 적절히 재배치해서 이런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박성현 예, 알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또 이와 관련해서 해수부 차원에서도 전체 항만에 대한 보안시설 점검이나 적정성 유무에 대한 판단 또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에 대한 걱정한 조치 여부, 이것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병진 위원 존경하는 수협중앙회장님, 앓살한 경상도 사나이시지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예.

○이병진 위원 말씀하신 것 항상 지키시고, 그렇지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예.

○이병진 위원 작년에 국정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회장님 연봉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기억나시지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예.

○이병진 위원 올해는 어떻게 됐습니까? 깎았어요, 아니면 동결했어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동결했는데요.

○이병진 위원 그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억 8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은 제가 연말에 특별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연말에…… 다른 직원들, 임직원 보면 한 2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거나 동결이 됐는데 유독 회장님만 늘었어요. 이래서 리더십이 발휘되겠습니까?

맛살한 경상도 사나이, 하면 한다, 안 한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예, 한다.

○이병진 위원 합니다.

또 수협의 부채가 1조 원이 넘게 늘고 있고 부채 비율도 한 800% 됩니다. 그리고 뿌리 깊은 부패도 근절되지 않고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께서 작년 국정감사 때 한 30곳에서 비리를 발견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그때 근절을 약속했어요. 그렇지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예.

○이병진 위원 근절됐습니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건, 한 건 고쳐서 연말에는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염려에서, 염려를 안 하게끔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런데 이게 아주 데칼코마니인데 국정감사 이후에 1월까지 19곳에서 31건, 166명이 비리로 적발이 됐어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회장님 1년 재임 기간에 총 91곳에서, 수협 조직 중 절반 가까운 조직에서 범죄의 행위가 발견이 됐어요. 횡령, 문서 위조라든지 또 감옥에 가야 될 사람들이 그냥 견책이나 경고……

가장 신뢰를 기본으로 하는 금융기관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된다, 안 된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안 됩니다.

○이병진 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직접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진 위원 올해 아쌀한 경상도 사나이의 맛을 한번 보여 준다, 안 보여 준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노동진 보여 준다.

○이병진 위원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장관님, 일본산 암컷 대게 유통과 관련해서 경북에서는 민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나라가 대게 자원 보호하겠다고 해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서 체장이 9cm 이하의 경우는, 그것 미달하면 포획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이런 법적 규제가 없다 보니까 일본에서 잡힌 대게가, 암컷 대게가 국내에 들어와서 소비가 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임미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일본산 암컷 대게인지 국내산 인지 사실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자료화면 보면 아시겠지만 입 모양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것을 소비자들이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구분 안 되지요. 거기다가 가격 차이는 좀 많이 납니다. 일본산 은 한 4000원 정도 그런데 우리나라 국내산 대게 같은 경우 암컷 대게는 한 2만 원 정도 한다니깐 이게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어민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은 거지요. 어족자원 보호하겠다고 해서 못 잡게 했으면 일본산 암컷 대게가 들어와서 국내산인 양 활개 치고 다니게 그냥 정부가 내버려 두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 거든요.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해수부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만약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불법 포획된 국내산 암컷 대게가 시장에 그냥 유통될 가능성이, 일본산 대게와 섞여서 유통되었을 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해수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우선은 관계부처 협력해 가지고 일본 암컷 대게가 유통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관계 법령 개정해 나갈 겁니다.

○임미애 위원 이게 법령 개정하셔야 됩니다. 시행령만 개정해 가지고는 이것을 근본적 으로 막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실제로 최근 5년간 암컷 대게, 체장 미달된 대게를 불법 포획한 현황인데요. 작년의 경 우 굉장히 많아요, 적발 마릿수가. 그러니까 어가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은 거지요. 일본 산 대게는 활개 치고 다니는데 국내에서 못 잡게 하고 이렇게 적발을 하고 하니까. 그러 니까 일본산 암컷 대게가 유통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야 할 문제이지 이것은 시행령 개 정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 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안 발의는 저뿐만이 아니라 박형수 의원 도 발의를 해 놓은 상태인데요.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대한 고시에도 수입수산물 안 된다는 것들을 올려 가지고 유통 자체를 좀 되지 않도록 그 2건으로 지금 진행을 하겠 습니다. 수산업법하고 아까 말씀드린 건 하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미애 위원 그리고 잠깐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싶은 건 양식장 재구조화 사업 있 지 않습니까? 기후위기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대책으로 양식장 재구조화 사업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업 계획을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 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현 위원 장관님, 앞에 몇 분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 활용과 관련해서 제가 시장 때부터 이 문제가 계속 논의가 돼 왔던 것인데 당초 국가 계획은 박람회가 끝나면 부지와 시설들을 일괄해서 매각해서 처분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었잖아요. 그런데 여수 시민사회의 노력 또 지자체 여수시와 전남도 또 해수부에서 도와줘서 방향을 바꿨지 않습니까? 이래서 박람회 정신을 살리는 공공개발로 하기로 방향을 바꾸고 21년도에는 공공기관인 항만공사가 인수해서 공공개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이 바뀌었던 말이에요.

그렇다면 2010년도에 박람회를 처음에 시작할 때 세웠던 당초의 자금 조달이라든지 상환 계획 같은 것이 국가 정책이 바뀌어서 전 바뀌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전례 없이 국가가 주도하는, 주관하는, 주최하는 이게 국제행사 월드컵이라든지 대전박람회 이런 데도 전례가 없는 선투자금 반환이라든지 이런 기형적인 형태의 과거 국가 계획은 이제는 바뀌었다고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보기에 또 법에도 보게 되면 국가도 지원할 수 있게 돼 있고 여러 가지 박람회 계승 사업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법에도 규정돼 있고.

그렇게 보게 되면 선투자금 남아 있는 것 3658억은 이것을 일괄해서 올해 안에 상환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것은 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법의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후보인 문재인 당시 후보가 2017년 2월경에 여수세계박람회장에 와서 박람회 정신을 살리는 공공 활용하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거기에 따라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중앙정부의 바뀐 정책에도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 뒤에 정권이 바뀌면서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서 너무나 강하게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한 번 바뀐 국가 정책 또 법에 따라야 하는데 법에도 어긋나게 일괄적으로 선투자금을 이렇게 상환 요구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우리 예결위 과정에서도 해수부 동의하에 우리 농해수위에서는 세입예산 전액 삭감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게 올해 안에 어떻게든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간에 이 부분은 중앙정부의 입장 변경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한 번에 3658억 원 상환하라고 한다면 천상 사채 발행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부지를 팔든지 둘 중 하나인데 이렇게 되면 박람회 정신 살리는 공공 활용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일단 올해까지 마스터플랜 용역이 진행이 되니까 끝나고 나서 자금조달 계획 보고……

1분만 좀 더 쓰겠습니다.

재투자한다든지 아니면 분할상환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은 동의하시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공감하고요. 중요한 것은 YGPA에서 엑스포 부지를 받아

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수익 구조를 낼 건지에 대한 용역하고 기획, 플랜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상환금에 대한 요청이 있을 때 얼마나 또 당황했겠습니까, 사실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은 이해하고 있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재정 당국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함께 힘을 모아서 마스터플랜 용역이 끝난 다음에 재정 계획 검토해서 여러 가지 해법을 모색하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실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경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장관님, 해상사고 계속 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내가 보니까 어선을 관리하는 선원들 또는 선주들의 안전불감증이 심하다 생각이 들어요. 저는 법령의 어떤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냐 하면 어선안전조업법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행규칙에 보면 30t 이상은 풍랑주의보가 나더라도 조업을 계속할 수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조경태 위원 이번에 여수 앞바다에 사고 난 것도 보니까 100t이 넘는 대형 트롤 어선이었습니다. 그래서 30t 이상인 배들은 풍랑주의보가 내리고 강풍이 나더라도 조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맹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법안을 준비해 볼 테니까 같이 상의해서 그리고 또 특히 풍랑주의보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수 앞바다에서 침몰된 선박에 보니까 구명조끼도 안 입었어요. 그래서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에 의해서 발생한 안전사고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지도하고 또 법령을 좀 바꿔서라도 풍랑주의보가 내렸을 때는 가급적이면 조업을 하지 못하도록,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동의합니다.

○조경태 위원 자연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인간은 없지요. 그것은 상당히 안전을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부산에서 APEC 해양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조경태 위원 그리고 또 아워 오션 콘퍼런스를 4월 28일부터 30일 역시 개최할 예정이고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조경태 위원 이때가 아마 결과가 어찌 나올지 모르지만 확률적으로 대선이 한창 치러지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만약에 한다면, 대선을 치른다면.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상하시고 있는 스케줄이라면……

○조경태 위원 예상하는 거지요, 예상. 저는 이게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빨리 되찾기 위해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수부에서는

이 총회에 대해서, 이 회의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서 실패하지 않도록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지금 국가 중요행사로 분류가 돼서 보안, 경비까지 전부 다 지원받는 행사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저희가 마무리를 하겠다는 말씀 드립시다.

○조경태 위원 혹시 저희 국회에서 또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 주시면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빈틈없이 이 총회를, 이 행사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고맙습니다.

○조경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원택 간사님 질의……

○문금주 위원 안 하신다는데……

○이원택 위원 예.

○위원장 어기구 감사합니다.

정희용 간사님도 질의하실……

○정희용 위원 이원택 간사님께서 안 하시기 때문에 저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훌륭하십니다.

양당 간사님이 질의를 안 하신다고 그러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업무현황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3항까지 42건의 법률안은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태 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에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문대림 위원님, 서천호 위원님, 이원택 위원님, 윤준병 위원님, 정희용 위원님, 문금주 위원님, 주철현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기관장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출석해 주신 기관장 및 관계 직원 여러분, 위원회 사무처 직원을 비롯한 의원실 보좌진 여러분 모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

#### ○출석 위원(19인)

김상욱 김선교 문금주 문대림 박덕흠 서삼석 서천호 송옥주 어기구 윤준병  
이병진 이양수 이원택 임미애 임호선 전종덕 정희용 조경태 주철현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전문위원 최선영

전문위원 임재금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차관 송명달

기획조정실장 이시원

해양정책실장 김성범

수산정책실장 홍래형

항만국장 남재현

대변인 정도현

감사관 류종영

정책기획관직무대리 권순욱

해양환경정책관 오행록

국제협력정책관 김명진

어업자원정책관 최현호

어촌양식정책관 서정호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단장 노재갑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원장 양영진

국립해양조사원

원장 정규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원장 윤현수

국립수산과학원

원장 최용석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장 김혜정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청장 김재철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청장 강정구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장 양동엽

해양경찰청

청장 김용진

차장직무대리 안성식

경비국장 여성수  
구조안전국장 박재화  
수사국장 김인창  
정보외사국장 고민관  
해양오염방제국장 송영구  
장비기술국장직무대리 서정원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오상권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이명준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장인식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성종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박상춘

부산항만공사  
사장 송상근  
경영본부장 진규호  
운영본부장 홍성준  
건설본부장 이상권

인천항만공사  
사장 이경규  
경영부사장 김순철  
운영부사장 김상기  
건설부사장 정근영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박성현  
경영부사장 황학범  
운영부사장 홍상표  
개발사업부사장 권동진

울산항만공사  
사장 변재영  
경영본부장 이형락  
운영본부장 정순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노동진  
지도경제대표이사 김기성  
조합감사위원장 조신희  
기획부대표 신황용  
경영지원부대표 이영준  
교육지원부대표 우동근  
금융지원부대표 이옥진

수협은행



은행장 신학기

집행부행장 도문옥